

제 8 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제 34 회 SGRA 포럼

한일의 동아시아지역구상과 중국관

■ 포럼의 취지

동아시아지역의 상호의존구조는 매우 복잡하며, 동아시아지역 구상도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포럼에서는 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한일의 동아시아지역구상에 대해 비교적 차원에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중국관의 한일 차이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각각의 테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다음, 패널토론과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한일동시통역>

SGRA

SGRA는 세계 각지에서 도일하여 장기간의 유학생활을 거쳐 일본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일파 외국인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개인과 조직이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나 전략을 수립할 시에 도움이 되는 연구,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행하고, 그 성과를 포럼, 리포트,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널리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연구 테마별로 다분야, 다국적의 연구자가 연구팀을 편성하여 광범위한 지혜와 네트워크를 결집하여 다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고찰하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SGRA는 어떤 특정 전문영역이 아니라, 널리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영역을 포괄하는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SGRA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SGRA 소식지 무료구독 안내

SGRA 포럼 등의 안내와 세계 각지로부터의 SGRA 회원의 에세이를 매주 1회(수), 전자메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지는 누구나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SGRA 사무국 (sgra.office@aisf.or.jp)앞으로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일의 동아시아지역 구상과 중국관

종합사회

김용희 (金雄熙) 한국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SGRA 연구원

일시
회장
주최
공최

2009년 2월 21일 (토) 오후 2시 30분 - 5시 30분, 종료후 리셉션
동경국제포럼 가라스동 G409 회의실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SGRA: 세그라)
(재)한국미래인력연구원, (재)아쓰미국제교류장학재단

14:30-14:40

개회사 이마니시 준코 (今西淳子) SGRA 대표

개회인사 이진규 (李鎭奎) 미래인력연구원원장,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4:40-15:00

[발표 1]

일본의 동아시아지역 구상 -역사와 현재- 5

히라카와 히토시 (平川均) 나고야대학 경제학부 교수, SGRA 고문

일본에서는 금세기에 들어서 「동아시아공동체」론이 붐을 이루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동아시아구상의 극단적인 예는 대동아공영권론이라 할 수 있는데 패전후 그러한 사고는 금기시되었다. 그후 반세기를 거치면서 다시 동아시아공동체가 회자되고 있다. 그것은 일본에 있어서 항상 국가와 인간의 존재양식을 묻는 극히 중요한 과제이다. 실제로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여하려고 해왔는가. 보고에서는 20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주된 동아시아구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5:00-15:20

[발표 2]

한국의 동아시아지역 구상 -한국의 지역주의- 23

손 열 (孫潓)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이 보고는 한국의 지역주의의 성격을 동아시아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일본 및 중국의 지역주의 전략과 비교하여 한국의 지역주의가 갖는 특징을 드러낼 것이다. 이는 지역의 범위, 성격, 정체성, 방법론의 측면에서 파악될 것이다. 이 보고의 주요사례는 2003-2005년도 동북아시아 구상과 동북아 균형자론에 이르는 시기가 될 것이다.

15:20-15:40

[발표 3]**일본(인)의 중국관**

33

가와시마 신 (川島 真) 동경대학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준교수

2008년의 「외교에 관한 세론조사」에서는 「중국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이 31.8%로 과거 최적의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에서는 「일본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수치가 증가했다고 한다. 종래 중일의 상호인식은 연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금년은 역행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인가. 이 보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중국관을 역사적인 경위와 근 30년간의 조사결과, 그리고 작년의 상황 등에 대해 개괄하기로 한다.

15:40-16:00

[발표 4]**한국(인)의 중국관**

39

김 상배 (金 湘培)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부교수

최근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이 보는 21세기 중국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일까? 정치군사적인 의미에서 본 지역패권의 등장인가? 아니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새로운 산업대국의 도전인가? 이 글은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부국강병론을 넘어서는 21세기 세계정치론의 시각을 통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 중국의 가능성과 한계는 다름 아니라 「지식」과 「네트워크」이라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두 가지 키워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16:00-16:15

휴 식

16:15-17:30

패널토론

46

진행 김웅희 (金 雄熙) 한국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SGRA 연구원

코멘트 (주제발표에 더하여)

「중국에서 본 한일의 중국관」

이 강철 (李 鋼哲) 호쿠리쿠대학 미래창조학부 교수

패널리스트 : 상기 강연자

17:30

폐회인사

시마즈 타다히로 (嶋津忠廣) SGRA 운영위원장

발표 1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구상 - 역사와 현재 -

나고야 대학 경제학연구과 · SGRA 회원 히라카와 히토시 (平川 均)

SGRA | 2008 | REPORT

서론

금세기에 들어와서 「동아시아 공동체」가 붐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일과성인 것이 아니라 오래동안 지속 가능할 것인지, 또한 그 결과의 산물로서 현실에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현 단계의 일본에는 아시아에 위치한 일본의 미래상으로서 「공동체」에 희망을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편,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현재 일본의 경제발전 구조는 아시아 의존과 중국 의존이 확실히 심화되고 있다. 한편,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 회사인 리만 브라더즈의 파산을 계기로 확산된 세계 금융 위기는 기존의 국제 경제 체제에 심각한 과제를 제기했고, 새로운 지역협력 형태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해 국제 경제 체제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시아를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지가 향후 진로에 있어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쇠국체제에서 벗어난 근대 일본의 아시아관과 아시아구상은 일본의 발전 단계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다. 서구 열강과의 대항 관계 속에서 일본의 독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단계로부터, 서구열강과 대등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단계를 거쳐 패전을 맞이했다. 그로부터 반세기를 거쳐 다시 동아시아 구상에 관해 활발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통해서 다시 역사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일본이 실제로 어떠한 동아시아 지역 구상을 해 온 것인지에 대해, 비록 보고

자가 이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고 시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아시아경제에 관한 연구를 지향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한다.

일본의 근대화와 동아시아

일본의 근대화와 아시아주의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아시아주의」를 소재로-

패전 후의 일본에 있어서 「아시아주의」는 터부시된 논의였다. 대동아전쟁에서 패전을 해서 그 명칭도 「대동아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바뀌었고, 또한 일본이 미국의 극동 전략, 아시아 정책 하에서의 부흥과 발전이라는 노선을 선택함에 따라 일본의 아시아 정책은 자국 발전의 부속적인 것으로 위치지워졌다. 아시아주의가 터부시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아시아에 관해 일본의 패전 전에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조차,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인 사회의 관심 밖에 놓여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 전의 아시아주의를 정면으로 다룬 초기의 연구가 다케우치 요시미의 『아시아주의』(1963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실린 다케우치의 「해설 아시아주의의 전망」이 그 출발점이 된다. 그는 아시아주의의 해석에 대해 「비교적 나와 가까운 것」이라고 해서 헤이본샤(平凡社) 『아시아 역사사전』의 「대아시아주의」항목에 있는 장문의 설명을 인용하였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구미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아시아 민족들은 일본을 맹주로 해서 단결하자는 주장. 아시아연대론 자체는 일본의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메이지 초년부터 주창되었는데, 특히 자유민권론자들의 주장 가운데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며 전개되었다. 예를 들면,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는 그의 민권론의 바탕이 되었던 자유 평등의 원리를 국제 관계에까지 적용해서 아시아 제민족의 저항을 정당화 하고, 이러한 저항을 위해서는 각 아시아 민족이 완전히 평등한 입장에서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또한 그 견해를 더욱 발전시켜 일종의 유토피아적인 세계정부론을 내걸기에 이르렀다.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와 오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郎) ... 등은 구미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의 나라들이 각각 국내의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서로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일본의 민족적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메이지 20(1887) 년대에 들어서면 이러한 민권론자의 아시아 연대론으로부터, 자유민권운동의 후퇴, 천황제 국가기구의 확립, 대청군비 확장 등에 수반해 대아시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 겐요샤(玄洋社)가 민권론을 버리고 국권주의로 전향을 표명한 것도 바로 1887년이였다(다케우치 1963:9-10).

다케우치는 역사사건의 설명과 그의 해석이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시아주의는 어떤 실질적 내용을 갖춘 객관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사상이 아니고 하나의 경향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익이라면 우익, 좌익이라면 좌익 속에 아시아주의적인 것과 비아시아주의적인 것을 형태에 따라 나눌수 있다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다케우치 1963:12).

「대동아공영권」에 대해, 「제2차 대전 중의 「대동아공영권」 사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시아주의의 귀결점이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아시아주의에서의 이탈, 또는 편향이었다. 만약 아시아주의가 실제적 사상이고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귀결점은 당연히 「대동아공영권」이었고 패전에 의해 「사상」으로서 소멸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해석은 전후의 한 시기에 있어서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대동아공영권」은 아시아주의를 포함해서 일체의 「사상」을 압살한 후에 성립된 의사 사상(擬似思想)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상의 탄압은 좌익사상에서 시작되어 자유주의에까지 이르고, 점차 우익도 대상이 되었다. 살아 남은 것은 「무사상가(無思想家)를 추종하거나 여기에 영합한 사상가들이었다」(다케우치 1963:13-14)라고 해서,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実篤), 도야마 미쓰루(頭山満), 히라노 요시타로(平野義太郎) 등을 들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메이지시대 전기의 일본과 동아시아

메이지시대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1873년의 정한론으로 시작되어, 1875년에 일본 군함에 대한 조선군의 포격사건을 계기로 강화도조약(1876)을 맺고 조선의 대일 「개국」을 강요했다. 그후 1880년대가 되면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한국)의 지배권을 다투게 되는데 결과는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일본에 의지하는 개화파의 「독립당」과 청나라에 의지하는 「사대당」의 항쟁은 1884년말 독립당 김옥균 등에 의한 쿠데타 실패로 끝나고,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동학당의 난) 시에 청나라와 이에 대항한 일본의 개입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청일전쟁의 승리는 대만의 할양을 실현시켰고, 계속해서 1904년 러일전쟁이라는 계단을 올라 일본은 조선(한국)을 보호령으로 만드는데 성공한다.

이 당시 독립당의 쿠데타 실패와 관련해서 1885년 오사카사건이 일어났다. 오오이 겐타로를 수령으로 하는 자유당 좌파가 조선에의 무장 개입을 획책한 것이다. 동학당에 대해서는 겐요샤가 비밀 결사인 덴유교(天佑俠)를 결성해서 지원해 전쟁을 도발했다.

다케우치가 자신의 의견과 가깝다고 인용한 『역사사전』의 설명처럼, 1880년대는 일본의 아시아관이 「대아시아주의」, 즉 침략적 아시아주의로 서서히 전환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루이 도키치가 한일의 대등한 합병에 의한 연방국가 건설을 주장한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한문으로 1893년 발간)의 초고를 쓴 것은 1885(메이지 18)년으로 여겨진다. 같은 해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지지신보(時事新報)』에 조선과 중국의 근대화에 대한 거부 자세에 강한 낙담을 표시하고 「탈아」를 주장했다. 이러한 두 주장은 대립하는 것인

데, 문명국 일본의 탄생과 함께 조선(한국)과 중국에 대한 견해는 대등한 협력, 또는 합병의 관계로부터 일본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위치지워지는 경향이 강해져 갔다. 러일전쟁에서의 승리, 1909년 10월 안중근에 의한 이토 히로부미 암살과 다음해인 1910년 8월의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화는 완결된다.

「아시아는 하나」와 중국관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1863-1913)이 「아시아는 하나」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동양의 이상』을 출판한 것은 1903년이였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오카쿠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카쿠라 덴신(이름은 가쿠쥬)은 아시아주의자로서 고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상가로서도 고립되어 있다. 그는 동시대의 같은 사상가들과도 교류를 하지 않았다. ...

덴신에게 있어서는 미(그리고 그것과 거의 같은 의미인 종교)가 최대의 가치로, 문명은 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는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서구만이 독점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의 영광이 아시아의 굴욕」인 현 상황을 변혁하는 것이 급무이고, 이를 위해서 「아시아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아시아는 하나」라는 명제는 뒤에 일본파시즘에 의해 「대동합방론」 못지 않게 악용되었다. 덴신이 「아시아는 하나」라고 한 것은 오욕으로 점철된 아시아가 본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로맨틱하게 「이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것을 제국주의에 대한 찬미로 해석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를 뒤집은 것이다 (다케우치 1963:42-43).

오카쿠라 덴신이 예술의 부흥을 위해 중국문명과 인도문명에 관심을 둔 것처럼 일본은 중국에 관심을 가져 갔다. 이와 동시에 1910년부터 20년대에 걸쳐 「아시아주의는 우익이 독점하고, 좌익은 프롤레타리아 인터내셔널리즘을 이것과 대치시키는 형세가 되었다. 그리고 좌익에서는 민족 문제가 약점이 되어 탈락자가 속출했다. 그 귀환처의 대부분은 아시아주의」였다(다케우치 1963:51-52). 천황제 하에서의 국가주의를 내건 켄요샤=흑룡회의 흐름이 대세가 된 것이다. 물론 다른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국혁명에 투신한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 1871-1925)도 그 한 명이였다.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1902년에 출판된 도텐의 저서 『33년의 꿈』의 해제에서 도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정직한 기록이라는 점 만으로도 대단한 가치가 있지만, 그 외에도 내가 경탄해마지 않는 것은 그의 태도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순수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나(支那)의 혁명에 대한 시종 일관된 순수한 동정에 이르러서는, 그 심경의 공명정대함이나 그 희생적 정신의 열정 모두가 우리들로 하여금 중국에는 숭고한 존경의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다케우치 1963:48).

미야자키는 「김옥균을 알게 되고, 이어서 삼이민 사업에 종사하고, 또한 필리핀 독립 운동에 참가하고, 그 사이에 강유위와 손문 양 파와 관계를 갖고 강과 손을 화해시키려는 일본인 그룹의 한 명으로 활동하고...신해혁명의 시대, 그리고 그 후에도 일관되게 중국 혁명 운동에 참가」 하는 것이다(다케우치 1963:46).

하지만 「대동아전쟁」에 이르게 되는 그 후의 시기에는 대부분의 아시아주의자가 침략을 지지해 가게 된다.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 A급 전범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1886-1957)는 도쿄제국대학 문과 졸업 후인 1913(다이쇼 2)년 간다(神田)의 헌책방에서 찾아낸 헨리 코튼의 『(개정판) 신인도』로 인해 영국 식민지 하의 인도에 눈을 뜨게 되어, 인도의 독립을 지원하고 아시아주의자가 된다. 1922(다이쇼 11)년에 『부흥 아시아의 제문제』를 저술해서 아시아 식민지화의 원인을 「정신적 생활과 사회적 생활의 괴리에 있다」고 하는 한편,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에서의 계급 투쟁과 아시아의 민족 투쟁의 격화가 열강들의 국제연맹 설립을 촉진시켰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연맹 규약 제 10조에는 「연맹국은 연맹 각국의 영토 보전 및 현재의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또한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이것을 도와 지킬 것을 약속함」이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 제 10조의 기능에 관해서 오카와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예속 국민에게서 자유를 회복할 권리를 빼앗고, 약소 국민에게서 강대해 지려는 권리를 빼앗고, 신흥 국민에게서 노령(老齡) 국민의 후계자가 될 권리를 빼앗으려는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시아 부흥의 격류를 국제연맹이 멈추게 할 수는 없다(오카모토 1998:214-215).

그러나 1925년에 상하이에서 5·30 사건이 일어나자 처음에 그 운동을 지나(支那)의 「민족적 자각의 대두」로 인식했던 오카와는, 이윽고 장개석의 북벌이 시작되고 만주에서의 일본의 권익이 위협을 받게 되자 일본의 권익을 옹호하고 중국과 적대하게 된다. 결국 1941년에는 대동아전쟁의 이데올로기가 되는데, 그의 생각은 세계는 초국가의 시대가 되고, 일본이 만주와 몽고를 일체화한 경제권을 건설해서 정치적 지배를 하는 것이 일본의 「생존과 세계사적 사명의 수행을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오카모토 1998:216).

중국의 혁명운동에도 관여하고 2·26 사건의 주모자로 총살형에 처해진 기타 잇키(1883~1937)의 경우, 일반적 평가인 초국가주의자, 파시스트라는 것은 왜곡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그는 의화단사건으로 출병한 러시아가 철병하지 않고 만주에 주둔하는 가운데 1903년 러일전쟁 시비 논쟁에 참가해서 이 전쟁을 「황백 인종의 결전」이라 정의하고, 일본이 황색 인종을 대표해 「아시아 민족의 흥망을 걸고 대처해야 할 전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오카모토 1998:180). 중화민국이 성립하고 일본이 다이쇼시대에 접어든 1912년에 기타는 중국의 혁명을 기록한 「지나외교야사(支那外交外史)」를 저술하는데, 요시노 사쿠조가 「지나혁명사증의 백미」로 극찬했다는 이 책은 일본외교를 비판하는 것이었다고 오카모토 고지(岡本幸治)는 말하고 있다.

기타가『외사(外史)』에서 무엇보다 힘을 주어 비판한 것은 일본 외교였다. 먼저 기타는 일본의 국운이 융성해짐에 따라 오만해지고 있다는 것, 이대로는 일본과 지나의 관계 악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일본 자신의 망국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지나에 대한 경시 외교의 근저에는 「열약자(劣弱者)를 모멸하고 우강자(優强者)에게 무릎꿇고 배례하는 노예의 마음」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강자」의 대표는 영국이다. ...기타는 러일전쟁의 목적이 지나보전주의(支那保全主義)이고, 이것이 일본 외교의 기축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영일동맹은 진정한 지나와의 연대(혁명 지나와 일본의 협력)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기타의 주장이었다(오카모토 1998:191-192).

그러나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얻게된 아시아에서의 유리한 입장을 이용하여 1915년에 지나 21개조 요구를 중국에 강요하자, 중국에서는 일화배척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타 잇키가 상하이에서 집필한 것이 1919년의 『국가 개조안 원리대강』이었다. 오카모토는 이것을 「개조 일본」과 「혁명 지나」의 연대를 기축으로 「아시아의 해방과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해서 구미가 지배한 세계를 변혁」(오카모토 1998:198)하려는 시도였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일본 개조안은 청년 장교들에 의한 1936년의 2·26 사건을 발생시켰고 기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사상가로서의 기타의 평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당시의 일본은 그가 우려한 「오만」 속에 있어서 그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로 해석되어, 일본 국내의 군부 지배와 침략으로 내몰아가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귀결은 기타가 우려한 바가 된 것이다.

한편 손문이 고베에서 「대아시아주의」 강연을 한 것은 1924년 11월이었다. 유럽을 「패도의 문화」, 아시아를 「왕도의 문화」로 비교해서 일본에 「서양패도의 개가 될 것인가, 동양 왕도의 간성(干城)이 될 것인가」(손문 1967)라 해서, 일본의 아시아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중일연대를 호소했다. 그러나 천황제에 의거해서 대국의식을 고양시키던 일본은 아시아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의 기대를 여실히 배반해 가게 된다.

가지마 모리노스케(鹿島守之助)와 범아시아주의

아시아주의에 대한 논의를 되돌아 볼 때, 지금까지 거의 언급되어 오지 않은 인물중 한 사람으로 범아시아를 주장한 가지마 모리노스케(1896-1975)가 있다. 시모노세키 조약과 삼국간섭 다음 해에 태어난 가지마는 1920년 도쿄대학 졸업과 동시에 외무성에 들어가 1922년부터 25년까지 독일 대사관, 1927년부터 29년까지는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그는 독일대사관 근무에서 돌아온 1926년 『범아시아 운동과 범구라과 운동』을 출판해서 범아시아를 주장하고, 쿠덴호프 칼레기의 범유럽사상을 일본에 소개했다.

가지마가 범아시아를 제창하게 된 것은 독일대사관 착임 후 얼마되지 않아 쿠덴호프 칼레기의 범유럽 논설을 접하게 되고, 또한 직접 그와 만날 기회를 얻어

그의 주장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가지마건설편 1978:369; 히라카와 2008a). 쿠덴호프는 (1) 과학기술의 발달이 전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2) 유럽에 소련의 위협이 존재하며, (3) 분열된 유럽은 미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의 위기감 위에서 유럽의 통합을 구상했다. 가지마는 그 구상을 분단 지배의 위기하에 있는 아시아로 가져와 범아시아에 꿈을 걸었다.

그는 쿠덴호프의 실천적 이상주의의 입장을 지지해서 전쟁 회피를 위한 국제연맹 질서를 받아들이고,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연합 또는 연맹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아시아에서의 각성운동을 일본과 중국의 운동, 또 하나는 인도,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중동, 근동의 운동으로 이분했다. 가지마는 이러한 차이에 관해 전자가 독립을 달성했고 후자가 식민지라는 점을 들었다. 근대화해서 얼마 되지 않은 일본이 아시아의 식민지 사람들과 함께 서구열강과 싸운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꿈일 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이들 나라들(—인도, 불령 인도차이나, 난령 인도 등의 식민지)을 동아 연방에 가맹시켜 연방을 범아시아 또는 유색연맹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영불란과 같은 나라들을 적으로 한 대전쟁의 야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우선 생명, 경제 및 문화의 파괴자인 전쟁을 회피하고, 조속히 실행 가능한 방면부터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이행된 완전을 바라기 보다는 불완전한 이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좋을 것이다... (나가토미[永富] 1926:26-27)

인도의 독립을 원조하는 의미에서의 범아시아 운동은 너무나 정신적이고 너무나 비정치적이다 (나가토미 1926:12).

이러한 중일연맹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침략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침략 정책에 기반한 전쟁이나 지나의 복수정책에 기반한 전쟁 모두 결국에는 일본과 지나의 붕괴로 끝나고, 그 결과로 이득을 얻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될 것이다. 그들은 동아를 아프리카처럼 분할해서, 먼저 몽고인종의 독립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 문명은 영원히 소멸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수정책이 불가능하다면 남은 것은 대대적인 화친정책이어야 한다. /일본은 반드시 침략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은 이를 회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나가토미 1926:51-56).

1935년에 가지마는 「신평화주의」를 발표해서 「적극적 평화주의는 오늘날 동아에 있어서 유일한 현실적 정책이다」라고 반전을 주장했지만, 1938년 두 권의 서적에서는 1936년의 일본과 독일, 37년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방공협정의 의의를 논해 일독방공 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효과의 첫 번째는, 일본, 이탈리아 협정과 함께 만주국 불승인선(不承認線) 파괴의 제일보다」라고 기술

하기에 이른다(가지마 1938:36). 그는 이 단계에서도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평가하는 한편으로 의문도 숨기지 않았지만, 1940년이 되면 구체적으로 히틀러를 평가하게 된다. 역사 추진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히틀러라고 해석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시아에 있어서는 일본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대동아공영권을 범아시아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다(가지마 1943:25).

가지마의 범아시아론의 특징은 쿠덴호프에 의한 범유럽운동과 그 후의 유럽통합운동에 촉발되어, 아시아에 통합 운동을 확산시키려는 것이었다. 그 방법에 있어서, 다른 아시아주의자의 대부분이 서구로부터의 해방을 전면에 내세워서 직접 행동을 일으키고 일본의 침략을 용인해 간 것에 대해, 그는 구미와 일본의 힘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시아의 단계적인 연맹을 구상했다. 그러나 대동아공영권이 주창되어 그 침략이 진행되자 여기에 꿈을 함께 실어 갔다.

그의 외교관으로서의 직업적 경험과 외교 연구학자로서의 입장은 실천적 이론적 기초를 근대국가 체계 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주장을 크게 규정했을 것이다. 한편으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경을 넘어 국가 체계를 파괴하는 혁명이론을 받아 들이지 못했다. 서구의 힘과 일본의 약함을 알고 국가의 범주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가지마의 강력한 반공산주의적 입장은 그가 경영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그에 의해 성립된 이론과 공산주의·사회주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융합될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외교관이었던 가지마의 범아시아주의는 구미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외부로부터 아시아를 파악해서 탄생한 아시아주의의 흐름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동아공영권」과 「대동아전쟁」(아시아 태평양 전쟁)

일본 군부는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다음해에 만주국을 성립시켰다. 하지만 국제연맹이 파견한 리튼조사단의 「만주국」 불승인을 거쳐 1933년의 국제연맹 탈퇴, 그리고 1937년 노구교사건에서 시작된 중일전쟁에 돌입해 간다. 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이 1939년에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의 눈부신 전과였다. 1940년 7월 제2차 고노에내각(육군대신 도조 히데키와 외무 대신 마쓰오카 요스케)은 이 시기를 절호의 기회로 판단해서 남진을 결단하고, 「대동아의 신질서」를 주창하며 동년 9월에 일독이 삼국동맹을 맺고 북부 프랑스령 인도지나(베트남) 진주를 개시했다. 대동아공영권 계획의 시작인 것이다. 결국 1941년 12월에 말레이반도 침공과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대동아전쟁」(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일본은 1943(쇼와18)년 11월에 「대동아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게 된다. 만주국과 중화민국 남경정부, 일본정부가 독립을 인정한 필리핀과 버마의 대표자, 그리고 임시정부를 인정한 인도의 찬드라 보스가 옵서버로 참가한 이 회의에서 대동아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제2회 대동아 회의는 전국의 악화로 개최하지 못하고, 다음해 1944(쇼와19)년 5월에 주일 특명전권대사 등을 소집한 「대사회회의」가 겨우 열리게 되었다(위키백과 「대동아 회의」 등에 의함).

참고로 공동선언이라고는 해도 참가국 대표의 선언 수정 요구는 거절되었다. 선언에서는 대동아전쟁을 「대동아를 미국과 영국의 질곡에서 해방」 하는 전쟁이라고 해서 자주독립의 존중과 상호원조가 주창되었지만, 현실은 그러한 말과 정반대인 점령정책이었다. 전황의 악화와 함께 항일운동이 도처에서 분출되고 연합군의 압도적 군사력에도 패배를 당해 1945년 8월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패전을 맞게 된다.

전후 일본의 아시아주의

전후 부흥부터 고도성장시대의 지역 구상

대동아전쟁 패전 후의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와의 관계를 일본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할 수 있다. 전쟁 책임 문제는 미소 냉전의 심화에 따라 일본에 유리한 배상 지불 형태로 바뀌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서명에 있어서 요시다 시게루 수석전권 수상이 말한 것처럼, 「역사상 일찌기 볼 수 없던 관대한 것」(외무성 1951:302)이 된 것이다. 도쿄재판에서 재판을 받은 전범도 일본 자체의 심판은 받지않아 스스로 전쟁 범죄를 재판하지 못했다. 배상도 일본에 대단히 유리했다. 게다가 배상은 일본의 발전을 위해 유감없이 이용되었다. 버마배상과 관련해서 1955년 8월 마이니치신문에 게재된 요시다 수상(당시)이 말한 말은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얼마 전의 버마배상은 상대가 투자라는 이름을 싫어해서 희망에 따라 배상 이라는 글자를 사용했지만 이쪽 입장에서 보면 투자이다. 투자에 의해 버마가 개발되고, 개발이 되면 일본의 시장이 된다. ... (마이니치 신문 1955.8.11)

배상 그 자체가 지금은 거의 잊혀졌으나, 배상에 관해서는 평가가 일정하지 않다고 해도 좋다(히라카와 2006). 더우기 이것은 ODA(정부개발원조)와 연계되어 갔다.

일본이 전후 부흥을 끝내고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이 목표가 되자, 일본은 아시아와의 관계 구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시아 각 나라들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서서히 출현하게 되었다. 일본 이외의 아시아의 지역 구상에 대한 일본의 자세까지 포함해, 몇 가지의 움직임에 관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가장 초기의 협력구상은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1961년에 제안한 아시아경제협력기구(OAEC) 구상일 것이다. 이 구상은 ECAFE 사무국장 우눈(U Nyun)의 요청에 의해 탄생한 「아시아경제협력에 관한 전문 삼인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제안이다. 삼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오키타 사부로(大来佐武郎)가 관련한 이 구상은 신흥 독립국의 국가주의적 경제정책 중시 경향 외에도 역내 대국에 대한 불신감, 일본의 미국에 대한 배려와 재정 부담에 대한 경계감 등의 요인으로 폐안이 되었는데(와이

트만 1964:329-335), 최대의 요인은 일본의 반대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OAEK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 이전에, 일본은 설립을 「시기 상조」라 해서 반대의 입장을 결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것을 좌우한 것은 농산물의 자유화로 인해 일본의 농업이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 농수성의 반대였다(호시로[保城] 2007).

OAEK에 반대했던 일본의 태도는 아마도 농산물 자유화 문제가 없었다 해도 미국의 의향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미국의 의향이 전해지기 전의 결정이란 점에서 일본의 국내 정치 구조가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호시로가 「재정 부담에 대한 염려와 국내 농업의 보호라고 하는 현재까지 계속되는 보편적이고 「내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다. 특히 농무성 대신이 보여준 것은 일본과 아시아와의 무역 그 자체에 반대한다는 자세였다」(호시로 2007:16)라고 적고 있듯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구조였다.

한편 그 후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공동시장 제안이 등장했다. 외무성의 외교 자료 공개를 전하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1966년 12월에 개최된 동남아시아 농업개발회의 예비 단계에서 라오스의 푸마수상(당시)이 「역내 공동시장」의 설립을 제창해, 「전혀 상정하지 않았던 구상인 만큼 일본을 당황하게 했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동남아시아 농업개발회의의 주제가 경제 개발이고 역내 무역 문제가 아닌 것을 이유로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닛케이신문 2005.2.25). 필자의 연구 부족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대응은 일본의 농산물 무역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1960년대에는 일본에서도 아시아태평양 무역에 관한 제창이 있었다. 1966년 고지마 기요시(小島 清) 히토쓰바시대학 교수(당시)는 태평양 자유무역지역(PAFTA)을 제창 하였다. 고지마는 이것을 제안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쇼와 39(1964)년부터 약 1년반, 바랏사 교수의 공동 연구에 참가. 그 성과가 후에 공간되었다. ...이 공동 연구중, 유럽공동체의 발전이 눈부신데 반해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태평양 경제권 구상의 발단이 되었다...

쇼와 40(1965)년 11월. 오키타 사부로(大来佐武郎)씨가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저개발국의 무역과 개발」에 관한 회의를 개최. ...여기서 「태평양 공동시장」이라는 나의 구상이 처음으로 나왔다. /쇼와 42(1967)년 3-4월. 나의 퍼시픽 커뮤니티 제안에 대해 당시의 외무대신 미키 다케오(三木武夫)씨가 주목을 하시고, 이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학자그룹에 의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명을 받았다. .../쇼와 43(1968)년 1월, 내가 조직위원장이 되어 「태평양 무역개발회의」(PAFTAD: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를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개최했다. 나는 한번으로 끝나는 회의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참가자의 관심과 열의가 높아 오늘까지 존속 발전하는 유니크한 일종의 학회가 되었다(고지마 1984:513-514).

태평양 커뮤니티 제안은 고지마에게 있어서는 유럽의 발전에 대한 위기감이

었지만, 이것은 제2차 대전 이전에 범아시아를 주창한 가지마 모리노스케의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양자의 관계는 현단계에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지마는 1965년에 미국의 「커렌트 히스토리」지를 참고하여 간행한 외교 잡지 『국제평론』 1966년 1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제창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가 이른바 아시아판 EEC로서 결성된다면, 존슨 미국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개발계획이나 ECAFE의 각종 개발 계획, 콜롬보 플랜, 현지 각국의 여러 계획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공동체와 중공과의 관계는 확실히 이데올로기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소련이 평화 공존으로 방향을 바꿔 서방의 절충안에 점차 열의를 보이게 되었다. ...언젠가는 중국 본토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세계 나라들과 우호, 협력, 자유 속에서 다시 협력하는 날이 오기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하자(『국제시평』 1966년 1월호).

최근이 되어 우리의 사토(에이사쿠), 미키(다케오) 외교 노선은 아시아태평양권 구상을 전면에 내걸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인 일본의 이러한 지역공동체 결성에 있어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 구상은 바로 나의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구상과 같은 것이다(가지마 평화연구소편 1966:7).

범유럽운동에서 범아시아주의를 구상한 가지마에게 있어서 유럽 통합의 진전은 자신의 구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고, 고지마의 구상을 받아들인 정계의 움직임은 그에게 큰 용기를 불어 넣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아시아의 국제 정치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중소 논쟁이 시작된 것이 1962년이고, 1964년에 중국은 핵실험에 성공했지만 1966년부터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한편 1967년에는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도 성립한다. 고도성장기를 맞이한 일본은 특히 미국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구가하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으로 방향을 크게 전환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가지마 자신이 언급하듯이 당시에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구상으로 이해되었다(코와렌코 외편 1988:68). 국력이 향상되기 시작한 일본에 의한 새로운 발전의 틀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다고 이해해도 그다지 잘못은 아닐 것이다.

환태평양 시대와 일본

1970년대에 들어서면 아시아의 국제정치 상황에 변화가 생긴다. 1971년에 중국의 국제연합 가맹이 실현되고, 1972년에는 닉슨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본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가 뒤를 이었다. 한편에서는 1973년 파리협정 체결로 베트남전쟁이 일단락되고 1976년에는 최종적인 남북통일이 실현되었다. 가지마는 1973년 여름에 「나의 장년에 걸친 범아시아 결성의 기원이 지금이 되어 겨우 그 전도에 커다란 전망이 보이게 되었다」(『국제시평』 73년8월호)면서, 아시아

태평양공동체 구상에서 다시 범아시아에 대한 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중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베트남전쟁의 일단의 해결을 목격한 그의 과제 재설정이었지만, 그 후에도 일본의 「전후의 끝」을 상징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1976년에 필리핀에 대한 마지막 배상 지불이 완료되고 1977년에는 ODA를 5년간에 배증시키는 「5년간 배증 계획」이 발표된다. 그 직후의 엔고에 의해 1978년에는 1977년 실적 14.2억 달러를 1980년까지 배증시키는 제1차 중기 목표를 책정해서 문자 그대로 주요 선진국의 지위로 올라섰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 시기는 새로운 동아시아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

실제로 이 때의 경제 발전구조는 환태평양경제권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1980년에는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義) 수상(당시)이 태평양협력 세미나를 제창하였다. 참가국은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ASEAN, 한국, 남태평양 도서국 등으로, 경제발전으로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던 아시아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 NIES의 발전이 주목을 받게되는데, 이것은 이른바 미일과 NIES로 구성된 성장의 트라이앵글 구조가 전면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었다. 환태평양 경제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져 갔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중국이 1979년 개혁 개방 노선으로 전환함으로써 동참하게 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미일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에 의한 본격적인 중국 진출도 시작된다.

1989년에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주도 하에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하면서 탄생하였다. 일본이 이 구상을 뒤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EC은 매년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1994년에는 인도네시아 보골선언을 채택해 선진경제는 2010년, 그 외의 경제는 2020년까지 역내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화 시대의 개막에 즈음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무역 자유화의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APEC의 실현과 관련해서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인 후나바시 요이치는 「아시아 태평양 퓨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당시의 현실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후나바시 1995).

하지만 1997년 7월에 아시아 통화 위기가 발발하였다. 태국에서 시작된 이 위기는 「전염」(contagion)을 특징으로 했고 일직선 글로벌화의 위험성을 아시아 나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당초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을 제안했지만 이것이 미국과 IMF의 반대로 좌절되자 300억 달러 상당의 엔을 통한 위기국 지원 계획인 신미야자와 구상을 내걸어서 동아시아 나라들에게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 통화위기를 계기로 해서 ASEAN+3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비롯한 각종 각료회의 설치가 시작되었고, 1999년에는 ASEAN+3 정상에 의한 사상 최초의 「동아시아의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히라카와 2002).

「공동체」 제창의 시대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구상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郎) 의 「동아시아 커뮤니티」 구상

2002년 1월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당시)은 일본·싱가폴 경제연대협정(JSEPA) 조인을 한 싱가포르에서 행한 정책연설에서, ASEAN에 대해 「함께 가고 함께 진행하는 커뮤니티」(a community that acts together and advances together)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으로 그 후에 이해되는데, 이것은 고이즈미에게 있어서 결코 오늘날 말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니구치 마코토는 주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구상은 확실히 지금까지의 일본의 다각적 자유화 정책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로의 정책의 일대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이 제창하는 「동아시아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인 것으로, 「커뮤니티」가 반드시 엄밀한 의미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막연한 지역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커뮤니티」 멤버도 1997년 무렵부터 제도화된 ASEAN+3을 넘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 커뮤니티」를 ASEAN+3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열린 것으로 하려는 일본 정부의 서방 선진국, 특히 미국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고이즈미의 제안에는 다니구치가 말한 것처럼 구성국을 ASEAN과 중국이 말하는 ASEAN+3에 제한하지 않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도 포함되어 있었다. 외부성은 이것을 「확대 동아시아 커뮤니티」라고 표현하고는 영문으로 「커뮤니티」를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했다. 또한 일본어로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했다. 결국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2004년 이후로, 동아시아 공동체 평의회 정책 보고서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본 정부는 「함께 가고 함께 추진하는 커뮤니티」(2002년 1월 고이즈미

싱가폴 연설), 「동아시아 커뮤니티 구축」(2003년 12월 「일·ASEAN」 특별 정상 회의), 「동아시아 공동체」(2004년 9월 고이즈미 유엔 연설, 2005년 1월 고이즈미 시정방침)라고 그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동아시아 공동체 평의회 2005:10).

*an East Asian community의 an과 community가 소문자로, 특정 커뮤니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으면 한다(다니구치 2004:34-35).

그 진상은 2004년 고이즈미 유엔 연설에서 「커뮤니티」의 번역을 어떤 실수로 인해 「공동체」로 번역한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어쨌든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이 ASEAN에서는 이미 열정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동아시아 공동체 평의회 의장 이토 겐이치(伊藤憲一)는 2005년 강연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10년 정도 전부터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최근에 이 사실을 깨닫고 놀라서 황급히 대응하려는 것일 뿐으로, 오히려 버스에 늦으면 안된다는 감각으로 일본인들이 이 말에 접하고 있는 것이 실태일 것입니다(이토 2005:3)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공식 장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마도 2001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 제출된 EAVG(동아시아 비전그룹) 보고서일 것이다. EAVG는 1999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한국대통령(당시)이 제안해서 설치된 검토위원회로 이 보고서의 표제가 「동아시아 공동체(an East Asian community)를 향해서」였다. 이 보고를 접한 ASEAN+3 정상회의는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확인했고, 다음해 ASEAN+3 정상회의에 제출된 EASG(동아시아 연구그룹) 최종보고서도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향한 협력의 구체적 조치를 제안했다.

그러면 고이즈미의 제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일본은 ASEAN을 대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해 온 역사가 있다. 본래 ASEAN+3 정상회의의 실현도 일본의 ASEAN에 대한 움직임이 하나의 계기였다고 한다. 1997년 1월에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당시)이 ASEAN과의 정기 정상회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ASEAN측이 30주년이 되는 1997년 ASEAN 정상회의에 중일 정상을 초대할 것이다. 하시모토의 제안은 당시 미일 방위 가이드라인의 재검토와 관련한 중국과 한국의 반발이 그 배경에 있었다. 일본은 우선 ASEAN과의 연대를 강화해서 이 과제에 대처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ASEAN이 밸런스를 고려해서 한중일을 회의에 초대함으로써 ASEAN+3 정상회의가 실현되었다. 이것이 우연히 아시아 통화위기와 겹쳐 역사적인 회의의 정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ASEAN 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신도·히라카와 편 2006;신도 2007).

그런데 2002년 1월의 고이즈미 제안은 2개월 전에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ASEAN이 10년 이내에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 한 것에 대한 대항책으로 제안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ASEAN에 대한 FTA 제안의 성공과 이에 대한 일본의 주도권 위기가 「동아시아 커뮤니티」 제안인 것이다.

일본과 동아시아 공동체

그러면 동아시아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가 탄생한 이유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파악하는 이해는 외무성이 1999년 8월 9월에 통화 위기에 빠진 나라들에 파견한 「아시아 재생 미션」 보고서에서 「운명

공동체」(a community with common fate)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내에 이미 일정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ASEAN의 주도권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ASEAN은 창립 30주년인 1997년 제2회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ASEAN 비전 2020」을 채택하고 ASEAN공동체(a community of caring societies)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ASEAN은 통화위기를 계기로 한중일을 초대하는 형태로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각료회의의 설치를 실현했다. 고이즈미의 동아시아 커뮤니티 구상은 EAVG보고서의 제안과 현실을 무시하고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ASEAN은 2003년의 정상회의에서 「제2 ASEAN 협력선언」(발리 코드II)을 발표하고, ASEAN 안전보장 공동체, ASEAN 경제공동체, ASEAN 사회·문화공동체를 통한 실현을 목표로 했다. 다음해 2004년 제10회 정상회의에서는 비엔티엔(Vientiane)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ASEAN 공동체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2006년 ASEAN 경제장관회의는 ASEAN 공동체를 5년 앞당길 것을 결정하고, 2007년 1월에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서 그것을 승인했다. 이와 동시에 ASEAN 현장을 작성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했다. 그리고 동년 11월에 개최된 ASEAN 40주년 제13회 정상회의에서는 ASEAN현장과 함께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에 서명을 하고, 2015년을 목표로 ASEAN 공동체 건설 로드맵을 책정하였다(히라카와 2008 b).

고이즈미는 2003년 12월에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도 도쿄 선언을 발표하고, 여기에서 「ASEAN 공동체 형성을 이끌어 내는, ...제2 ASEAN 협력선언 실시에 대해 전면적인 지지를 보낼 것」과, 나아가 「동아시아 커뮤니티 구축을 제창한다」(외무성 HP 임시번역)고 주창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묘하게도 이 회의에 중국과 한국의 지도자는 참가하지 않았다.

2004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개최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미국의 옵서버 참가를 제안했지만 ASEAN과 중국의 신중한 자세로 실현되지 않았고, 회의를 「열린 범주」로 하기 위해 고심했다. 2005년 12월의 제1회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각 매스컴은 일제히 중일간 주도권 분쟁을 표제로 사용했다. 아사히신문(2005년 12월 4일) 「중일 주도권 분쟁」, 닛케이신문(동년 12월 8일 석간) 「동아시아 공동체 교섭 주도권 노리는 중국/미일 견제」, 마이니치신문(12월 14일)은 「(동아시아 공동체) 주도권 다투는 중일」 등의 헤드라인을 붙여 기사를 보도했다.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한 입장은 미국에 대한 배려와 중국 견제였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일본의 전후 외교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다. 자율성이 높아지는 ASEAN과 중국에 대해 미국 의존을 계속하는 일본이 어떻게 관계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이였다.

현재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와 이것이 원인이된 실물 경제에의 심각한 영향을 통해 세계의 구조 변동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번영은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평화에 직결된다. 국경을 초월한 번영의 틀 안에서 자국의 발전을 생각하는 시대적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

-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구상의 신지평 -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은 일본의 근대화와 함께 창출되어 각각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그려져 왔다. 메이지시대의 정한론에서 시작된 대외인식은 1880년대 중순을 경계로 변화하게 된다. 당초에 일본이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관련해 아시아 제민족과의 연대나 연합을 통해 서구 열강에 저항하려는 인식은, 국력의 강화와 천황제 확립에 따라 일본의 지도권 하에서의 아시아 해방론으로 변질되어 갔다.

청일과 러일 양 전쟁을 통해 한반도를 지배 하에 두고, 나아가 1910년 한일병합으로 한반도의 식민지화는 완성된다. 19 세기에 있어서는 1885년이 전환점의 상징으로 생각된다. 이 해에 다루이 도키치는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에서 한일의 대등한 합병을 주장하였고, 한편으로 후쿠자와 유키치는 조선의 개화파가 패배하자 「탈아」 를 표명했다.

20 세기에 들어서면 1910~20년대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전환기의 또 하나의 구분점이 된다. 이 시기의 아시아주의는 「우익」의 독점이 시작되어 아시아의 해방과 일본 민족의 세계사적 사명이 제기되고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적 사상이 용인되어 간다. 천황제를 받든 일본민족의 「오만」이 그것을 밀어붙이게 했던 것이다. 그 마지막 도달점이 대동아공영권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의 서전의 승리가 일본을 독일일 삼국동맹으로 내달게 하고, 자원의 보유처로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대동아」의 전쟁을 결단시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현실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말과는 정반대인 군국주의에 의한 일본의 아시아 지배였고, 결국 이념은 각 개인의 심정적 문제를 넘어서 침략을 합리화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대동아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의 전후 동아시아정책은 전후 처리인 배상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이것은 동서냉전을 배경으로 지극히 「관대한 것」에 머물렀고 그것도 일본의 발전과 깊이 관련된 관점에서 실시되었다. 1960년대 초에 탄생한 ECAFE의 아시아 경제협력기구 구상에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농업 보호 문제가 부각되었다.

전후 일본의 아시아정책의 태동은 1960년대 후반의 태평양 커뮤니티,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론의 등장일 것이다. 일본의 경제력 증대와 환태평양 무역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이러한 구상을 출현시켰다. 1970~90년의 시기는 특히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유엔 복귀로 상징되는 사회주의권의 국제사회 복귀를 통해 환태평양 경제통합이 진행되었고, 일본은 배후에서 이러한 협력적 기본 틀의 형성을 지원했다. APEC는 바로 그 정점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미국에 의한 글로벌화에 수반된 불안정성을 출현시킨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에 의해 지역 협력 시대로의 진행을 촉진시켰다.

금세기에 들어서 제기된 고이즈미의 일본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은 당초에 「동아시아 커뮤니티」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협력을 강화하는 정도의 구상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의해 보다 협력 관계가 강한 지역의 공통 목표로서의 「공동체」 논의가 되었

다. 이러한 제안은 동아시아에서 선행되고 있는 공동체 움직임에 대응해서 일본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의식해서 나온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동아시아 공동체봄에 대해 대동아공영권론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서 경계심을 갖는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배후에 중국의 패권주의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해서 미일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본고의 개략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정책에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커다란 조건상 변화가 존재한다.

1.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동아시아구상, 즉 대동아공영권으로 귀결되는 아시아 주의를 물론 호사스러운 것이었지만, 일본이 일찌기 근대화에 성공해서 국력을 증강해 감에 따라 우월감을 갖게했다. 이것은 아시아의 맹주로서 서구 열강과 대치하는 일본과 아시아를 떨치하는 일본을 허용하게 했다.
2. 전후 배상이 문제가 된 시기에는 일본의 부흥에 동아시아를 활용한다는 기본 정책이 취해졌지만, 그 후 동아시아 국가들과 지역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틀 안에서 발전함에 따라 일본이 주도권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보다 제약을 받게 되었다.
3.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제안은 이미 일본의 독점물이 아니게 되었다. 일본은 오히려 ASEAN과 중국의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에 뒤떨어지지 않고, 발전을 계속하여 국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항책으로 발표된 측면이 강하다.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에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현재가 역사의 재현이 아니라는 점이다. 첫번 째로,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의 경제력은 과거 반세기 동안 상대적으로 확실히 줄어들었다. 1980년대 동아시아 GDP 총액에서 점하는 일본의 비율은 80%를 넘었다. 그러나 현재는 반을 겨우 넘는 정도이고, 대신해서 급증한 것이 중국이다. NIES와 ASEAN도 그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두번 째로,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리스크가 확대되고 지역협력 강화가 과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각국의 발전이 국경을 초월한 범주 안에서 비로소 달성되고 있다. 국익을 초월한 지역이익이라는 시점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최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지만, 그 발전은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 구조의 전환기에서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일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국경의 범주를 넘어」 지역과 자국의 번영을 일체화시킨 틀을 만드는 것이다.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을 지역을 기반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일본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길인 것은 분명하다(히라카와·코바야시편 2009). 현재 금융의 자유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온 미국의 시장 만능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가 동국에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했고, 세계는

새로운 국제경제제도가 요구되는 국면에 처해 있다. 지역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충실한 구상을 일본이 제시할 수 있다면 일본의 동아시아지역 구상은 지역의 공공 재산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인용 문헌

- 후나바시 요이치 (1995) 『아시아 태평양 퓨전-APEC과 일본-』 중앙공론사.
- 외무성 (1951) 『샌프란시스코회의 의사록』 외무성.
- 동아시아공동체 평의회 (2005) 『정책보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현재, 배경과 일본의 국가전략』 8월.
- 히라카와 히토시 (2002) 「아시아 통화 위기」 『이와나미 강좌 동남아시아사 9 「개발」의 시대와 「모색」의 시대』 이와나미 서점.
- (2006) 「배상과 경제진출」 구라사와 아이코·스기하라 다쓰야 외편 『이와나미 강좌 아시아-태평양전쟁 제7권 지배와 폭력』 이와나미 서점.
- (2008 a) 「가지마 모리노스케와 범아시아주의」 나고야대학 『경제과학』 제55 권 제4호.
- (2008 b) 「동아시아의 지역 통합에 있어서의 ASEAN의 역할」 『국제 아시아 공동체 저널』 창간호 (11월).
- 히라카와 히토시·고바야시 나오아키 편 (근간예정)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공동 설계』 니시다 서점.
- 이토 겐이치 (2005) 『동아시아 공동체의 꿈과 현실 (사단법인 아시아 친선교류협회에서의 강연 기록)』 동아시아 공동체 평의회.
- 가지마 평화연구소 편 (1968) 『제1회 가지마평화상 수상 기록·수상자 쿠덴호프 칼레기 백작』 가지마 연구소 출판회.
- 가지마 건설 편 (1978) 『가지마 모리노스케-그 사상과 행동-』 가지마건설 주식회사.
- 가지마 모리노스케 (1938) 『방공협정과 나치스·파시스트 혁명』 간쇼도 서점.
- 가지마 모리노스케 (1943) 『제국의 외교와 대동아공영권』 요쿠산 도서간행회.
- 고지마 기요시 (1984) 「고지마 기요시 명예교수 자작 연보」 『히토쓰바시 논총』 제92권 4호.
- 이·이·코와렌코 외편 (1988)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론-구상·플랜·전망-』 협동산업 (주) 출판부.
- 오카모토 고지편 (1998) 『근대 일본의 아시아관』 미네르바 서방.
- 신도 에이이치 (2007) 『동아시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쿠마 서방.
- 신도 에이이치·히라카와 히토시 편 (2006) 『동아시아 공동체를 설계한다』 일본경제 평론사.
- 손문 (1967) 「나의 아시아주의」 다마시마 노부요시 편역 『중국의 일본관』 고분도 신사.
- 다니구치 마코토 (2004) 『동아시아 공동체-경제통합의 행방과 일본-』 이와나미 신서.
- 나가토미 모리노스케 (1926) 『범아시아 운동과 범구라파 운동』 호쿠분칸.
- 다케우치 요시미 (1963) 「해설 아시아주의의 전망」 다케우치편 『아시아주의』 지쿠마 서방.
- 와이트먼, D. (1964) 『아시아 경제협력의 전개-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활동의 평가와 전망-』 (일본ECAFE협회 번역) 도요경제신보사(Wightman, David (1992) Towards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Washington D.C.: Yale University).

발표 2



한국의 동아시아지역구상 - 한국의 지역주의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손열 (孫洌)

들어가며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야 한다는 지적, 정책적 담론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꼭 해야 하는, 당위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역주의가 시대의 메가트렌드 (megatrend)임은 사실이지만 무엇을 위해 어느 영역에서 어느 수준의 제도화를 꾀할 것인지, 또한 그 구성원 (동아시아)의 범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개별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주가 스스로를 엮는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도 “모여보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모임의 범위와 빈도, 성격을 규정하는 일종의 정체성 구성작업이다. 지역공간은 그 정체성 구성여하에 따라 특정구성원에 유리, 편리할 수도 있고 불리, 불편할 수도 있다. 동아시아에 부재한 것은 바로 구성원 모두에게 득이 되는, 혹은 동의하는 공통의 생활공간이다. 이는 공간적 정체성이 부여되어 이익의 균형이 유지될 때 비로소 성립된다. 따라서 지역은 결코 자명하게 주어지고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작업의 결과이다. 지역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정치적으로 경합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

동아시아에서 지역은 실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서로 다른 지역구상 들을 모색, 전파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ASEAN)을 바짝 끌어안는 한편 상하이협력기구 (SCO)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엮고 있고, 일본은 아세안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엮는 동아시아공동체를 본격적으로 띄우고 있으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APEC)의 기능 확대

를 통해 동아시아만의 지역주의 움직임의 견제하려 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동북아를 하나로 묶는 공동체작업을 추진해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이들 구상의 이면에 서로가 중심이 되려는,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기중심적 지역전략이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서로 다른 속내가 담긴 지역구상이 정치적으로 경합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지역의 현실이다. 이는 국가간 “편가르기의 싸움” 이라기보다는 모임의 성격규정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의 양상을 띤다. 중국은 미국을 뺀 지역을 구성하려는 반면 일본은 중국주도의 지역에 편입되지 않으려 자신의 이익이 대변되는 공동체론을 적극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그들의 이익이 실현되는 지역이 되도록 관여해 왔다. 한편 한국의 동북아론 역시 자신(한반도)의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풀려는 자기중심적 구상이다.

서로 다른 지역구상의 경합 속에서 자신의 지역을 강요하게 될 때 그리고 물리적 능력이 받쳐줄 때 이는 제국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라크 침공이후 미국이 짜는 중동질서가 그 지역의 구성원들의 자발적 혹은 준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할 때 제국으로 비난받게 되는 것이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전전 일본의 동아협동체 혹은 대동아공영권 역시 공동체의 탈을 쓴 제국담론으로 비판받았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경합은 동의를 구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싸움이 된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의 표현에 따르면 소프트파워의 싸움이다. 소프트파워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게 만드는 일종의 매력(attraction)이다. 그렇다면 특정 지역구상이 지역구성원들에게 얼마만한 매력을 가지는가가 그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지역구상을 주창하는 행위자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이른바 하드파워를 넘어서 소프트파워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 글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현상을 서로 다른 지역이 구성되고 경합하는 국제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지역주의는 서로 다른 집단·국가들에 의한 창조의 경쟁이고 지식의 경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이른바 지역성(regionness) 찾기 즉, 국가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성립하려면 국가성(stateness)을 갖듯이 지역을 지역답게 만드는 공통적 인자(因子, DNA) 찾기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혹은 공유해야 할 특정한 무엇이 찾아져야 하는 것이다. 지역구상의 매력은 바로 매력적인 지역인자를 찾는 혹은 창조하는 일로부터 도출된다. 이는 특정한 가치일 수도, 지정학적·경제적 고려일 수도, 이념일 수도 있다.

지역구상의 경쟁이 지역성의 창조 -- 지역인자의 매력적 창조 -- 경쟁이라면 과연 지역구성원 서로가 공유하는, 서로에게 통용될 수 있는, 서로에게 매력적인 지역인자는 무엇인가? 각국(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은 어떠한 지역인자를 제시하여 지역성을 구성하고 협력과 통합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는가? 이들이 제시하는 지역성은 상대방에게 매력적인가? 한국은 어떠한가? 지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매력프로그램으로서 이른바 “서울컨센서스(Seoul Consensus)”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동아시아 질서변동

동아시아란 지역공간은 20세기 초반 영미의 이중패권, 1931-45년 일본패권을 거쳐, 1945년 이후 형성된 냉전의 이중패권을 거쳤고,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란 시대적 추세와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들을 안아왔다. 동아시아는 근대로의 불완전한 이행 속에서 파생된 다양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남북한과 중국-대만은 근대국민국가를 성취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독도, 조어도 등 영토문제, 한중일간 과거사문제 역시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된 분쟁이다. 또한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비확산 전략과 정면충돌하는 21세기적 문제도 안고 있다. 보다 중요하게도 동아시아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전통적 세력균형 갈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근대적 이행을 완성하거나 탈근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경쟁과 갈등, 협력의 동학은 21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탈냉전기의 도래와 함께 세상은 다극화를 전망하였지만 오히려 미국중심의 단극(unipolar) 질서로 재편되어왔다. 미국은 군사비를 미국다음으로 군사비를 많이 쓰는 15-20개 국가들의 군사비 총합계보다 더 쓰고 있다. 또 미국은, 핵무기, 재래식 군사력, 첨단 군사력의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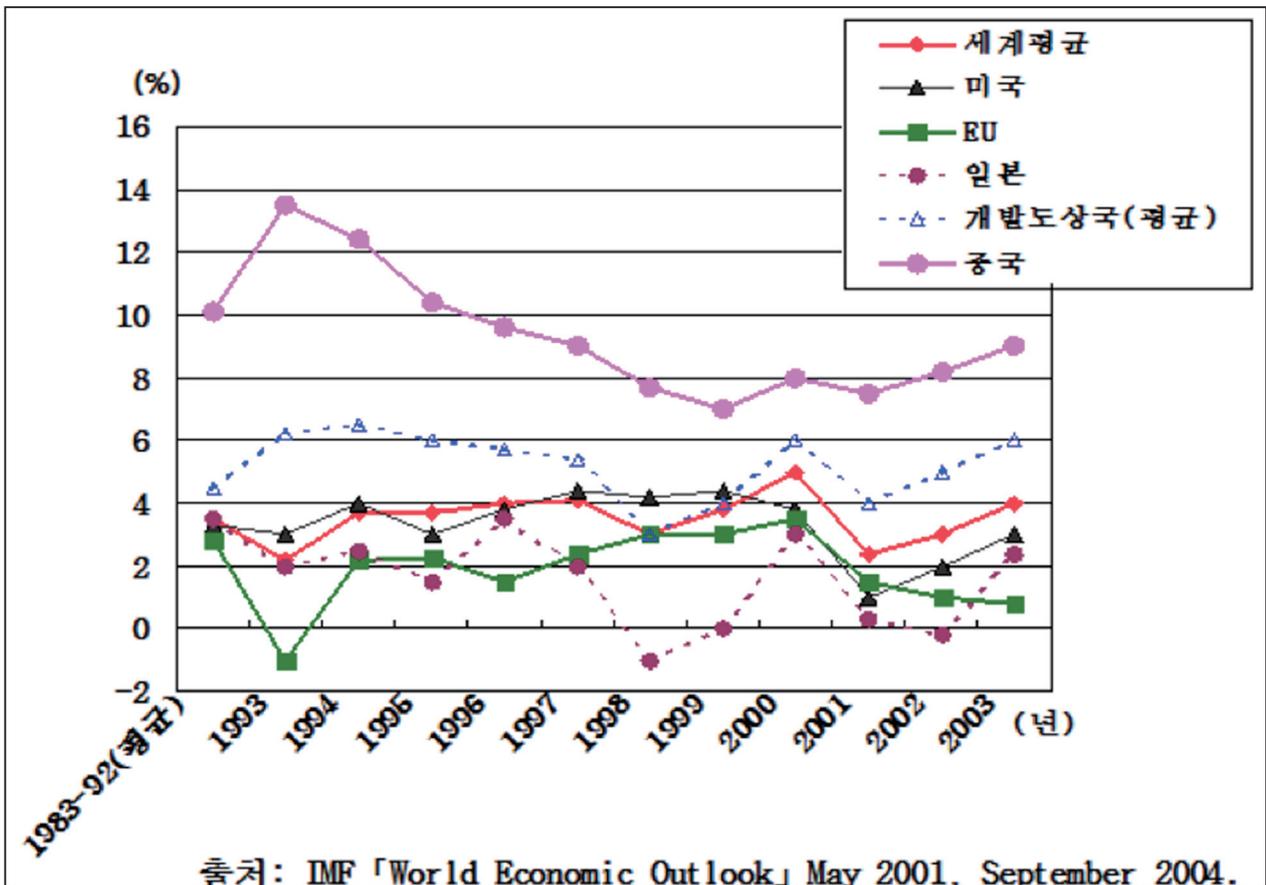


표 1-1. 세계 및 BRIGs의 실질 GDP 성장률

국경제는 현재 세계 2위의 일본경제보다 두 배가 훨씬 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1세기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부상하고 있는 기술력의 경우에도, 미국의 연구개발(R&D)비가 미국다음의 7대 부국 연구개발비 총합계와 맞먹을 정도의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미국의 단극질서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동요의 모습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두 방향에서 파악된다. 첫째는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으로 인한 이른바 지구불균형(global imbalance)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유례없이 확대되는 한편(2005년 GDP 대비 6.4%) 동아시아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지역별 불균형현상으로 인해 달러화가 동요할 경우 경착륙으로 인한 미국경기의 버블 붕괴, 소비침체, 경기침체, 세계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금융패권을 장악해 온 미국의 지위가 결정적으로 동요된다는 뜻이다.

둘째는 경쟁국의 부상이다. 이는 이른바 BRICs 그중에서도 중국의 부상으로 대표된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표 1-1>에서 보듯이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9%이상의 실질 GDP성장율을 기록하면서 현재 세계 6위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무역 면에서도 수출 세계 제4위, 수입 제3위이며 대내외국직접투자(inward FDI) 세계 제1위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구매력평가(PPP)기준으로 GDP를 평가할 때 이미 일본을 추월하였고 현재 미국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일본을 추월하고 2050년경에는 세계최대 경제대국이 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생산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세계인구의 1/5이 중국인이며 머지않아 인구의 15%에 달하는 약 2억이 연수입 1억 원 이상의 중산층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구매력 왕성한 중산층의 출현으로 소비와 생산 양 측면에서 거대경제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력은 곧 군사력으로 이어진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재정지출의 증가는 국방비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방비는 대체로 미국, 러시아 다음의 규모, 아시아 최대규모임에는 틀림없다. 이와 함께 첨단군사화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상대적 쇠퇴라는 이른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현상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국방부 및 강경론자들은 중국의 도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봉쇄론을 거론해 왔고, 중국은 이를 정확히 인식해왔다. 이른바 화평굴기(和平掘起) 혹은 평화적 부상론은 한 국가의 부상이 주변국의 불안을 생성함으로써 전쟁을 초래하고, 또 그 전쟁에서 부상국이 항상 승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 시발되었다. 중국이 과거 부상국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들면서 중국은 국가전략으로 “중국민족의 위대한 부활”을 제시하면서 2020년까지 2000년 GDP 기준 4배(약 4천억불)에 이르는 “소강사회”를 실현시키겠다고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중심주의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대외전략으로 평화적 부상론이 주창되어온 것이다.

평화적 부상론을 내건 중국에 대해 미국은 점차 경쟁자보다는 협력 파트너로 보는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2005년 쥘릭 (Zoellick) 당시 국무부 부장관의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 (responsible stakeholder)” 론은 변화하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세계정치질서의 조종과 관리에 중국을 이해당사자로 위치시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여와 협조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자국의 패권적 지위가 도전받지 않도록 중국에 대해 위험분산 (hedging)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기도를 보일 때 군사적 억제장치를 준비해 놓는 것이다. 또한 이는 대중관여의 효과를 높이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 핵심은 미·일군사동맹이다. 미국은 맹방인 일본과의 군사적·외교적 협력관계를 한층 긴밀화하고 그 활동공간을 확대하여 대중견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나아가 미국은 호주, 인도, 한국과의 양자동맹을 활용하고 또 이들간 다자협력 (이른바 민주동맹)을 통해 관여와 견제를 중층적으로 수행하려 하고 있다.

미·중간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역내 위험요소로서 북한문제와 대만문제가 잘 관리된다면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본격적 세력 전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미·중간 세력전이로 미국을 대체하는 중국패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를 이루면서 경제적으로 일본을 따라잡고 곧 미국수준에 육박한다고 해서 그간 미국이 누렸던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장악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의 GDP가 미국에 견줄만한 수준에 이르더라도 기술, 지식, 군사력, 소프트파워 등 국력을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평화적 부상으로 중국이 성취할 수 있는 최대치는 미국과 세력의 분점이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미·중 평화는 전쟁 없이 차별적 성장을 해나간다는 것이지 경쟁과 국지적 분쟁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니다. 즉, 미중평화가 동아시아지역의 국가간 경쟁과 대립, 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일관계가 이를 대표한다. 중국과 일본간의 세력전이가 본격화됨에 따라 양국은 여러 국지적 문제에 있어 경쟁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다. 중국의 제안에 일본이 반대하고 일본의 제안에 중국이 반대하는 일이 증대되고 있다. 평화적 부상을 원하는 중국은 대미관계와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전면적 대결구도를 지양하는 속에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미국보다 더 크게 세력전이에 따른 안보불안을 느끼면서 중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는 속에서 일본은 더 큰 상대적 쇠퇴를 겪어 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금융부실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동요로 일본경제는 기록적인 장기 불황을 겪어야 했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보내면서 한때 기록적 고도성장으로 전세계에 회자되었던 일본모델은 실추되었고, 약체 연립정권이 반복되면서 정치적, 외교적 리더쉽도 약체화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1990년대 사실상 제로성장을 기록해야 했으며 국가재정상태는 OECD국가 중 최악으로 매년 30조엔 이상 적자를 기록해 왔다. 다행히 이를 막대한 국민의 금융자산이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2002년을 기점으로 경제가 완전한 회복세에 있다는 점이다. 3%정도의 GDP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고 실업율은 감소추

세에 들어섰으며,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부실이 해소되었다.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성과가 드러나는 속에서 디지털 가전이 IT혁명을 선도하면서 성장(회복)의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인구감소와 사회적 활력 저하라는 잠재성장률의 한계를 가져오는 요인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안보딜레마를 겪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맹주로 처하던 역내 패권적 지위 역시 동요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의 핵심은 앞서 언급한 미일군사동맹이다. 일본은 1996년 미일안전보장 공동선언, 1997년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거쳐 2004년 신안보대강, 그리고 2005년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에 이르기까지 일체화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호주, 인도를 엮는 민주동맹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의 흐름 속에서 강대국간 경쟁과 협조의 국제정치를 보여주는 한편, 이 지역은 경제통합의 길을 걷고 있다. 1950년대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의 과정에 접어들고, 1960-70년대에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NIES)의 부상, 1970년대말-80년대 아세안국가들의 성장, 1980년대말부터 중국의 기록적 고도성장이 이어지면서 동아시아지역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기능해 왔다. 이들 국가는 수출주도형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무역과 직접투자(FDI)의 상승효과에 의해 고성장을 기록해 왔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무역과 투자 양 측면에서 역내 의존도가 상승해온 사실이다. 특히 1995년이래 역내무역이 활성화되면서 향후 10년간 역내수출액이 9.6배로 확대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EU의 5.5배, NAFTA의 5.2배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04년 기준으로 동아시아의 역내수출액비중은 50%로서 EU의 67.2%, NAFTA의 55.9%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는 1980-90년대 대외직접투자의 역내유입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2000년 IT버블의 붕괴로 일시적인 감소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대중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동아시아에 유입된 직접투자규모는 세계전체의 약 20%로서 그중 50%정도가 중국투자이다. 여기서 2003년도 동아시아의 역내직접투자잔고는 90년대 대비 6.9배 증가한 1조403억불 규모로서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3.5배, 세계전체의 4.4배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역내 투자 및 무역의 확대 이면에는 이른바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의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역내분업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투자와 무역을 매개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어 온 중국민족 중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더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지구 생산 네트워크가 역내 재진입하여 보다 중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사회·문화영역에 있어서도 역내교류가 심화되어 왔다. 문화컨텐츠의 교환, 지식교류, 인구이동의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교류에 있어서 미국중심성이 약화되고 있다. 한류(韓流)의 부상은 글로벌 문화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문화산업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미국 일변도의 문화생산이 탈중심화되는 와중에서 성립된 일종의 문화변환의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문화네트워크의 확산은 인터넷을 매개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향후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시장주도의 경제통합, 사회문화적 교류의 심화란 동아시아의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시대의 대세이며 주요국가간 경쟁과 협력의 동학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 세력전이의 흐름 속에서 국력의 상대적 격차를 유지 혹은 저지하려는 각국에게 그들의 경제적 성장이 통합화하는 지역경제의 활력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통합을 추동하되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통합되는 지역경제의 중심에 서서 동아시아국가들을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역통합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미국과 경쟁하려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미일동맹을 하나의 축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중국과 지역통합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미국은 APEC의 강화, 일본판 동아시아공동체의 측면지원을 통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질서가 형성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아세안은 중·일간 경쟁의 틈새에서 지역통합추진의 운전석(driver's seat)에 앉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 끝으로 한국 역시 한·중·일을 엮는 동북아공동체를 모색해 왔다.

요컨대, 패권전이의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국익추구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지역주의 움직임은 주권의 이양과 공유를 통해 초국적/지역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국이 중심이 되는, 자국의 이익을 보다 대변하는 서로 다른 지역구상의 경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지역을 엮으려는 속내는 유럽의 그것과 차이를 보인다.

매력과 컨센서스

지역내 행위자간 협력과 통합이 성취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패권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 다자협력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다자협력구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APEC을 이끌어왔으며, 미국이 배제된 동아시아공동체의 등장을 적극 견제하면서 기존의 양자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대테러전쟁과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는 목적에서 일본, 인도, 호주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새로운 움직임이다. 그러나 물리적 힘에 의한 협력의 주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패권국의 힘이 약화되거나, 패권국에 대항하는 반패권동맹이 형성되면 효과적인 지역협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전통 지역질서도 일면 중국의 패권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변민족들의 군사적 도전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조공체제를 유지하며 주변의 복속을

이끌어 낼 때, 지역협력이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힘이 약화될 때, 주변민족들은 언제나 중국을 침략하여 중원을 차지하였고, 막대한 경제적 자원을 소유하고자 계획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21세기 중국의 부상을 둘러싸고 이른바 “네 번째 중국의 부상 (the fourth rise of China)”이라는 담론이 생산되고 있다. 진한, 당송, 명에 이어 동아시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상을 중국 역사상 네 번째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통 지역질서의 역사를 볼 때, 패권의 부상에 따른 지역협력질서는 명백한 한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패권국이 약화되었을 때, 주변국들은 협력질서에서 이탈하여 오히려 중국을 위협하는 양상을 띠었던 것이다. 21세기의 지역질서에서도 중국뿐 아니라, 어느 국가라도 주변의 진정한 협력을 도모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지역협력을 이끌 수 없다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

권력에 기반한 지역협력 이외의 지역인자는 공통의 이익이다. 여러 국가들이 공통의 이익을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들 때, 지역협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통합이 지구적 규모에서 진전되면서 상호 간의 경제적 이익에 의해 지역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중일 간 역사 및 영토문제가 불거져도 전격적인 경제관계의 단절을 각오할 수 없는 이상, 협력에서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관계의 악화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장에 의한 평화가 그것이다. 문제는 역내 행위자간 이익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중일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관계의 제도화 장치가 성립되기 어려운 까닭은 이들간 이익의 균형이 다양한 원인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익의 지역다자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패권적 권력의 존재, 이익의 균형을 넘는 별도의 지역인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 지역인자는 소프트파워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권력과 이익이란 하드파워적 인자와 함께, 혹은 보다 중요하게도, 지역성을 구성하는 소프트파워적 인자가 존재할 때 지역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에서이다.

소프트파워란 1989년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 (Joseph Nye)에 의해 만들어져 통용되어온 언어이다. 나이는 권력 (power)의 행사를 채찍을 통한 강제 (coercion), 둘째는 당근을 통한 유인 (induction), 셋째는 상대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바를 원하게 만들도록 끌어들이는 것 (attraction)이라는 세가지 유형으로 대별한 후, 권력의 자원 (source)이란 측면에서 하드파워는 채찍과 당근 즉,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소프트파워는 문화, 이념, 외교 (공공외교)술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그는 권력의 행사방식 (mechanism)으로서 하드파워가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바를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강제, 유인하는 능력이라면 소프트파워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바를 원하도록 구성하는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요컨대, 나이는 권력이동 (power shift)의 두 가지 차원, 즉 권력자원이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비물질적 자원으로 이동하는 현상과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이 직접적인 강제와 유인의 방식으로부터 간접적인 매력의 작동방식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소프트파워란 하나의 개념으로 엮어내었다.

이러한 소프트파워는 매력 (魅力), 즉 “마음을 호리어 끄는 힘”의 작동으

로 이해된다. 매력이란 상대방의 가슴을 품는 힘과 머리를 사로잡는 힘, 즉 상대방의 정서를 자극하거나 지식으로 설득하는 능력이고, 또한 이들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지역을 단위로 한 구성원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끌어 자발적 협조를 이루어내는 소프트파워 혹은 매력이 필요하다. 즉, 이들을 하나로 엮는 매력적인 인자를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특정국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역내 구성원인 타국에 대해 매력있는 지역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동아시아에는 세력전이에 따른 국가간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 경쟁이 지역을 엮는 싸움으로 즉, 서로 다른 지역을 구성하고 경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경합은 본질적으로 정치군사적 패권과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간 매력의 경쟁으로 드러난다. 경쟁의 성패는 바로 매력적인 지역인자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나아가 매력인자의 제공 뿐만 아니라 그 제공자 즉, 발신자의 매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매력적인 지역프로그램도 이를 주창하는 자의 매력이 없으면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역협력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 하드파워적 요소와 함께 매력 (발신내용의 매력과 발신자의 매력)이 작동할 때 성취되는 것이다.

이 글은 매력을 담는 이런 프로그램을 “컨센서스 (consensus)” 로 표현하고자 한다. 예컨대, 베이징 컨센서스 (Beijing Consensus)는 중국의 매력을 발신하는 한 표현이다. 이는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의 대항개념으로서 중국식 발전모델을 매력적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런 용법으로서 컨센서스란 언어는 본시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유래하였다. 1990년 윌리엄슨 (John Williamson)은 워싱턴에 소재한 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미 재무부)들이 중남미국가들에게 제공한 정책제안의 최소 공통분모로서 자유화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워싱턴 컨센서스라 불렀다. 이는 미국이 제3세계 국가들에 제공하는 일종의 정책매니페스토 (policy manifesto)인 동시에 나아가 그들이 걸어갈 미래를 제시하는 이념프로그램이다. 애당초 윌리엄슨이 특정한 공간 (중남미)과 시간 (1990년대초)에 적용되는 정책어젠다로서 제시한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책적 차원을 넘어 이제 보다 확장된 의미의 컨센서스 즉, 체제전환에 있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란 이념적 프로그램으로 진화해왔다. 체제전환에는 미국이 원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광범위한 지적 수렴 (intellectual convergence)의 결과로 인식되어 질 때, 따라서 보편적 특징을 갖는다고 비취질 때 매력적인 것으로 수용되어지게 되나, 반대로 미국의 이익을 돕는 특정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비취질 때 그 매력은 반감될 것이다. 중남미에서 이 용어를 조소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후자의 경우가 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미국의 물리적 힘과 지적 매력을 담는 미국발 발전프로그램인 것처럼 서로 다른 국가들은 서로 다른 컨센서스를 생산할 수 있고 또 그래왔다. 앞서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발 발전프로그램으로서 이는 동아시아란 지역, 나아가 이를 넘어 제3세계 개도국에 어필하려는 전략적 소산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 론을 매력적으로 포장하여 지역의 틀 속에서 협력과 통합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는 도쿄컨센서스가 될 것이다. 그

리고 한국이 매력으로 동아시아를 엮으려한다면 이는 서울 컨센서스로 표현될 것이다. 요컨대, 동아시아란 공간은 컨센서스의 싸움 즉, 자국의 지역프로그램으로 동아시아의 컨센서스를 도출해 내려는 치열한 매력공세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동학을 파악해야 한다. 이 작업은 곧 동아시아란 지역공간을 엮는 주요국의 정책 및 이념프로그램이 제시되고 경쟁하는 동학을 매력의 시각에서 평가,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곧 서로 다른 컨센서스의 구성과 경합을 밝히는 작업이다. 동아시아의 주요 행위자인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북한의 컨센서스를 대상으로 하여 그 전략적 의도, 추진경위, 콘텐츠의 매력을 파악한 후 한국은 동아시아를 엮는 매력인자를 경제와 문화영역에서 탐색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매력프로그램 즉, 서울컨센서스를 구성,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발표 3



일본(인)의 중국관

동경대학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가와시마 신(川島 真)

들어가는 말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구상할 때, 상호인식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감정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정책면에서도 외교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만을 한정해서 봐도 상호감정이 결코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다. 2008년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중국에 친근감을 느낀다」라고 답한 비율이 31.8%로서 과거 최저치였다. 최근 중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다지 좋지 않다.

단지, 작년의 경우, 중국에서는 「일본에 친근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종래, 일·중간의 상호의식은 연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금년은 역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현상이고,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의 일본의 중국관을 역사적인 경위, 30여 년간에 걸친 조사결과, 그리고 작년의 상황 등을 중심으로 개괄하고자 한다.

근대일본의 중국관

에도시대부터 일본은 중국에 대하여 존경의 마음을 품어왔지만, 차츰 중국에 대한 자립성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메이지시대에는, 예를 들면 주일공사관에서 황준헌(黃遵憲)과 오코우치 테루나(大河内輝声)와의 필담기록에서도 보여지듯이, 한시문이나 유학적인 소양을 기초로 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한자 등 사서오경적인 수양이 일·중간의 「사(士)」에 있어서 교류의 기반이 되

어 성립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에도말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일본의 문인들에게는 중국에 대한 독립성을 의식한 논의가 있었고, 새로운 세계인식의 원형이 육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일본/서양이라고 하는 삼분법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문적 세계뿐 만 아니라, 화양중(和洋中)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깊이 파고 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전문영역인 외교사의 분야에서는, 청일수호조약이 양국에 있어서 최초의 평등조약이었지만, 그 이후 일본은 불평등조약 개정을 추구하기 위해, 구미열강들에게 중국이 (근대적인 의미에서) 비문명국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본이 조약개정을 행할 때, 영국 등이 일본에 대해 조약개정을 인정하게 되면, 중국에게도 인정해야 하므로 그러한 이유에서 주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중국과 일본의 상이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면, 1874년 대만출병을 둘러싼 언설 등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발견된다. 즉, 국제법을 이해하는 일본과 세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중국이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시켜 그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등식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고정화되었다. 예를 들면,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청일전쟁을 정당화했다. 「청나라에서는 여전히 낡은 습관을 고집하고, 국내 및 국외의 정세에 있어서도, 그 낡은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바다를 사이에 둔 양국(일본과 중국)은, 한 나라는 서구문명을 대표하고, 또 한 나라는 동아시아적인 습관을 지키려고 하는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다. 예전에는 일본의 한유자(중국 유교 연구자)는, 자국을 모욕하면서까지 항상 중국을 ‘중화’ 또는 ‘대국’이라고 부르며, 숭상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일본은 중국을 완고하고 어리석고 도리를 모르는 보수국으로 경멸하고, 또한, 중국은 일본을 가볍고 서구문명의 꺾모습만을 모방하는 작은 섬나라의 오랑캐로 경시하고 있다. 이 두 나라의 국민감정은 숲과 얼음과 같이 전혀 다르고, 언젠가는 큰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중국관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서구적 문명)/일본/동양(전통적)이라고 하는 삼분법과도 연결된다. 근대일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로서의 서양, 부정하고자 하는 대상인 동양(그 대표로서의 중국)이라고 하는 등식으로 세계관을 묘사한 측면이 있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이 단순히 서양을 모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기 시작하였고, 또한 아시아주의의 시대 하에서 일본이 자신을 보다 아시아 측에 근접시키려고 했다는 측면이 보이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전시체제하에 있어서도 ‘과학’이나 ‘객관성’이라고 하는 서양문명의 근간을 중시하고, ‘보편적’인 문명을 섭취, 소화함에 있어서, 중국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으로만 행하고, 일본은 ‘일본정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 소화하고, 나아가 고양시킬 수 있었다고 인식되었다. 물론 그 ‘일본정신’은 일본인만이 품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식민지나 공영권의 사람들도 그러한 정신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물론 식민지의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아시아주의의 시대에 있어서도, 결국 일본인의 아시아에 대한 우위성은 더욱 강화

게 인식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삼분법은 전쟁중에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초기 일본의 중국관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선으로서의 시대 구분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일본의 중국관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였으며, 또한 중국은 전승국임을 실감할 수 있었을까? 전후 초기의 상해신문에는 일본인의 생활이 전쟁에서 이긴 중국인 보다 더 풍요롭다고 지적한 기사가 많이 실렸다. 한편 일본에서도 삼국인(식민지 국민을 비하한 표현)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인식의 문제가 불거졌다. 가지 와타루(鹿地 亘)도 「일반적인 일본인, 또는 보수적인 일부의 일본인은 진주만이라고 하면 B29 격투기를 떠올리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노구교(盧溝橋)라는 단어를 들으면 금방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칠칠사변의 중요성과 일본의 역사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鹿地亘 「七·七記念日を 맞이하여」 『중국유학생보』 제 33호, 1949년 7월 1일). 또한 『장개석 일기』를 읽으면, 스스로 일본인에 대한 보복을 금지한 정책이 실패했다고 공개할 정도로 전후 일본인이 여전히 중국에 대해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고 개탄하는 장면이 많이 발견된다. 이것은 일본사회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패전은 의식해도, 중국에 대한 패전은 의식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후 초기 일본에서는 좌파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중국의 문화혁명에 대한 공감이나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전운동 등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우호운동 등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 중일우호운동이 어느 정도 메이지 이후의 중국관, 혹은 삼분법적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1972년에 일중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었을 때, 물론 대만지지자가 없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극히 높은 상태였다. 아마도 80% 정도가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1980년대에는 교과서문제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일본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했다. 특히, 그 시기에는 일본은 경제면에 있어서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천안문사건 이후의 상황 (일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제시)

여기에서 제시되는 표는 일본에 있는 어떤 미디어가 패널 조사한 데이터의 결과로서 단순히 ‘좋다’, ‘싫다’ 라는 감정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몇몇 나라들과 비교해가며 조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경향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특징은 있지만, 수치 그 자체가 호감도를 나타내는데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감정의 추이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위에 제시한 표를 포함해서 몇 개의 여론조사를 검토해보면, 1980년대의 ‘밀월’에서 보여지는 일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1989년의 천안문사건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에 의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격감하였고, 이후 80년대와 같은 상황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충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확실히, 1990년대 초반, 일본은 다른 서구국가들 보다 앞서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전기신(錢其琛)의 『외교십기』에도 기술된 바와 같이 중국측의 정책이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천황이 중국을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천안문사건 이전으로는 회복되지 않았다. 천안문사건은 중국의 비문명성이라고 하는 메이지 이후의 일본의 중국론을 재차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공산당을 지지했던 우호운동에도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천안문사건에 의한 중국관에 대한 변용은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 ‘좋다’, ‘싫다’라는 감정간의 대등한 상황에 변화를 준 것은 1996년 3월에 행해진 대만해협의 미사일 발사실험이다. 이것은 중국이 군사적, 또는 안보보장적인 측면에서 위협적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충격이었다. 그 이후 ‘좋다’, ‘싫다’라는 감정이 대등하게 유지되던 상황에서 ‘싫다’라는 감정이 ‘좋다’라는 감정을 상회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금세기 들어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술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심양총영사관 사건에 이어, 축구시합사건, 반일데모 등에 관한 사건이 보도될 때 마다, 중일간의 상호인식은 극히 악화되었다. 여기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었지만, 혹시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호전되었을까라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천안문사건이나 미사일사건 등을 통해 중국의 비문명성 혹은 위협을 감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연속해서 발생한 사건 등에 의해 더욱 더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유의할 점은 종래와 같은 삼분법을 더욱 더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정치대국, 군사대국을 넘어서 현저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유수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일본은 종래와 같은 목표로서의 서양, 부정해야 할 대상인 동양=중국이라고 하는 등식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굳이 강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은 아닌가 하고 추정 가능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용은 중국의 존재를 자기인식에 대한 중요한 논리의 근거로 삼아온 일본의 정체성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대국으로서의 중국, 발전하는 중국, 글로벌 파워로서의 중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의 상황

중국의 국력이 정치, 군사, 경제 등의 측면에서 일본과 대등하거나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기도 한 단계에 있어서 일본의 중국관은 어떻게 되었을까? 전술한 것과 같이 2008년의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라고 답한 사람이 31.8%로서 과거 최저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일본과 대

조적인 상황으로 나타났다. 금년, 일본의 조사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여성의 중국관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68.6%가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고, 29.5%가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57.1%가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또한 20대의 40% 이상이 친근감을 느낀다고 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식품 또는 위생관련문제에서 ‘생활상의 위협’ 대상으로서 중국이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양국정상의 교류를 통해 개선될만한 문제가 아니고, 삼국지나 중국의 역사를 강조해서 해결될 문제 또한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국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에 있어서 일본이 ‘생활상의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다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대칭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측은 어떠한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일 성과를 강조하는 미디어의 선전 때문인지 또는 사천대지진 때 일본의 활동이 평가되었기 때문인지 중국에서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소득 별로 본 조사결과에서는 고소득자일수록 일본에 대한 친근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국의 경제발전이 일본에 대한 감정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미지수이다. 2008년은 중일 쌍방에 있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맺음말

동양/일본/서양이라고 하는 삼분법 하에 있었던 일본의 중국관은 전후 일본에서도 계승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존재감을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일본내부에서 거부감이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1990년대 이후의 중국 위협론일 것이다. 현재도 예를 들면 2008년의 올림픽, 티벳문제에 대한 보도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언설이 지배적이지만, 중국의 존재감 그 자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에 상관없이, 전제조건으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지만, 중국 그 자체에 대한 불신감은 정치나 역사인식문제가 아닌 차츰 생활 그 자체에 위협을 주는 존재로서 중국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없이 일본의 일상생활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양자는 긴밀한 관계에 있지만, 현재 중국의 존재를 파트너로서 중시하는 경향은 국민감정 레벨에서는 지배적이라고 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역사인식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지만 국가주석의 방일이나 주요 미디어의 선전 덕분에 대일 감정은 종래보다 호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감정의 호전은 일본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도야코 서미트에서 일부러 사천대지진 시 일본 구급대의 활동에 대해 일본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일본 미디어는 그 부분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이 또한 대시민외교(Public Diplomacy)의 일환이었지만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여성이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덜 느끼고, 중국에서는 고소득자가 일본에 대해 친근감을 더 느끼는 것처럼, 성별, 세대별, 지역별, 소득별 등 상호간의 이미지가 분화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고이즈미 (小泉)정권 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대중감정의 큰 기복이 지금은 보이지 않게 되어 중국정보에 대해 국민감정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지만, 역으로 호전시키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고이즈미정권 하에서는 정랭경렬 (政冷經熱)이라고 이야기되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2008년 10월) (2009년 2월 17일 접속)
<http://www8.cao.go.jp/h20/h20-gaiko/images/z09.gif>
- 리서치 여론조사 (2009년 2월 17일 접속)
- 「최근 가장 우호관계가 깊은 나라」 (2008년 5월)
<http://news.searchchina.ne.jp/disp.cgi?y=2008&d=0801&f=research0801001.shtml&pt=large>
- 「중국의 소비자, 국가로서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친근감」 (2008년 12월)
<http://news.searchchina.ne.jp/disp.cgi?y=2008&d=0801&f=research0801001.shtml&pt=large>
- 가와시마 신 · 기시 도시히코 편저 『자료로 읽는 세계의 8월 15일』 (야마가와출판사, 2008)
- 가와시마 신 「역사이야기 속의 근대중국론: 일본은 왜 중국의 주요적일까」 『RATIO』 01호, pp.53-85 (코단사, 2006년 2월).
- 아렌 · S · 화이팅 『중국인의 일본관』 (이와나미 서점, 1993년)
- 야마구치 이치로 『근대중국대일관의 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1970년)
- 류걸 · 가와시마 신 『1945년의 역사인식』 (동경대학출판사, 근간)
- Stef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발표 4

한국의 중국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김 상 배 (金 湘培)

머리말

중국의 부상과 21 세기 동아시아

탈냉전과 탈탈냉전 (post-post cold war)의 맥락에서 본 미국의 패권 쇠퇴, 중국의 부상, 일본의 보통국가화, 러시아의 재(再)강대국화 등에 더하여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지역통합, 디지털 신세대의 부상 등으로 대변되는 탈근대 요소를 띠는 변화가 발생. 이러한 와중에 최근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보는 21세기 중국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일까?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에 야기할 변화와 그 여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정치군사적인 의미에서 본 지역패권의 등장인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새로운 산업대국의 도전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전통 동아시아 천하질서(天下秩序)의 부활인가?

이 글에서는 ‘한국의 중국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기보다는 중국의 부상과 그 미래를 읽어내는 몇 가지 토론주제를 제시하려고 함

정보화와 지구화의 맥락에서 본 ‘지식(knowledge)’과 ‘네트워크(network)’의 시각

이는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근대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민국가들이

벌이는 부국강병(富國強兵)의 게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분석틀의 탐구와 맥을 같이 함. 즉 하나의 국민국가로서의 중국의 부상을 설정하고 이것이 자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이나 아니면 이득이나를 묻는 식으로 파악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식의 현실주의적 발상을 넘어서는 시각으로 중국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할 필요

21세기 동아시아 세계정치는 적어도 19세기 동아시아에서 경험한 부국강병의 권력게임이나 근대 국민국가들만의 국제정치(politics among nations)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국제정치 학계의 논의가 소위 소프트 파워(soft power)나 국민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에 주목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 중국의 가능성과 한계는 다름 아니라 기술-정보-지식-문화(통칭하여 '지식')와 '네트워크'라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두 가지 키워드(필자의 용어를 빌자면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에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임

이 글에서는 정치경제, 소프트 파워, 동아시아 네트워크 등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6개의 토론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함

중국의 정치경제와 관련하여

토론주제-1 : 중국 경제의 미래 지식경쟁력?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를 상회. 이는 동기간 세계 평균성장률 3.3%의 세배에 가까운 고도성장. 경제규모 면에서도 중국의 GDP는 2005년 2조 2,343억 달러로 영국을 제치고 세계 4위. 2006년 말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교역국의 반열에 오름

이렇게 고속성장을 계속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경제규모 면에서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제1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 그러나 중국 경제의 양적 성장 그 자체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오히려 중국경제가 창출하는 시장수요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기존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던 분야(예를 들어 제조업, 조선, 가전, 자동차)에 진출하는 산업경쟁자로서의 중국의 미래일 것임. "20년 내로 중국이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등장. 실제로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동아시아와 세계시장에 진출. 그러나 아직은 Made in China 또는 중국제(中國製)의 이미지는 '저가의 신뢰하기 어려운 상품' 이미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의 산업은 이러한 이미지를 극복할 과제를 안고 있음. 그 핵심은 바로 기술경쟁력 또는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경쟁력, 그리고 상품의 브랜드를 창출하는 지식과 문화의 상상력. 통칭하여 '지식 경쟁력.' 그렇다면 중국은 양적 투입의 단계를 넘어서 질적인 차원에서의 '지식 경쟁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을 것인가? 'IT China'의 미래는 어떠한가? 경제

와 산업 분야의 추격자가 아닌 새로운 선도부문 (leading sectors)에서의 경쟁자로서 새로운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토론주제-2 : 국가 주도형 정책, 제도의 미래 효과성?

선도부문에서의 지식경쟁력을 갖추는 과제와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의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제도조정 (institutional adjustment)의 문제도 중국의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관전하는 중요한 포인트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경험을 돌아보면 경제추격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소위 ‘발전주의 (developmentalism)’ 에 기반을 둔 정책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였지만, 그 추격이 끝나고 선진국들과의 경쟁이 벌어지는 선두그룹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이 의문시되었음. 예를 들어 제조업 분야에서 작동하던 산업조직과 산업정책이 정보통신과 IT분야에서는 한계를 드러냄.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제도조정 문제를 야기. 상징적으로 말해 “hardware institution for software technologies” 의 딜레마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실제로 중국이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는 우주기술과 같은 소위 국가기술 (state technology)의 분야임. 이에 비해 민간 주도의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IT분야나 생명공학 (biotechnology)분야에서는 애로점이 보고되고 있음. 예를 들어 생명공학 분야에서 사스 유전자 서열을 밝히는 연구에서 기술력이나 자원에서 앞섰던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 샘플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공유를 제약)보다 앞서 성과를 올린 측은 다양한 협력 및 협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캐나다의 연구소

그렇다면 제조업 분야의 발전주의 담론을 넘어서 중국이 21세기형의 ‘지식국가 (knowledge state)’ 와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지원하는 기술혁신체제 (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소프트 파워와 관련하여

토론주제-3 : ‘베이징 컨센서스 (Beijing Consensus)’의 매력?

정치경제적 효율성의 스토리와 짝을 맞추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중국 정치체제의 매력, 즉 소프트 파워의 문제. 이는 시장경제체제와 정치적 권위주의의 병행이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 다시 말해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치체제의 민주화 문제. 이와 관련된 문제는 2004년 5월 영국의 The Foreign Policy Centre의 라모 (Joshua Cooper Ramo)의 연구보고서에서 ‘베이징 컨센서스 (Beijing Consensus)’ 라는 용어를 통해서 확인됨

베이징 컨센서스는 미국 주도의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에 대한 대항담론의 성격이 강함. 워싱턴 컨센서스는 1990년 미국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IIE)의 존 윌리엄슨 (John Williamson)이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제시하면서 제기. 그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과 IMF, 세계은행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명사가 됨. 미국이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global standard)’ 로서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조합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제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도 정치적 권위주의를 유지하는 중국의 발전모델은 미국적 글로벌 스탠더드의 대안적 경로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실제로 동유럽과 러시아와는 다른 점진적 개혁개방 모델로서의 중국. 베이징 컨센서스는 특히 정치적 권위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비민주국가의 통치엘리트에게는 큰 매력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중국모델은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에서 나타난 시장경제와 권위주의의 조합 모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박정희의 개발독재 모델로 대변되는 발전국가 모델을 경험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 베이징 컨센서스는 큰 매력이 없음. 베이징 컨센서스는 한국이 극복해야 할 과거 경험을 정리한 것이 지 미래의 발전모델이 아니기 때문

오히려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정치적 권위주의를 딛고 일어서 민주화의 다이내믹스를 잃지 않는 동태적 과정 (process)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이를 굳이 이름 붙이자면 ‘서울 컨센서스 (Seoul Consensus).’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서울 컨센서스는 국제체제에서 특정한 위상과 발전단계의 국가들에게만 주는 정태적 ‘특수모델’ 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동태적인 보편모델’ 의 의미가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의 베이징 컨센서스의 매력은 특정한 발전단계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특수모델의 의미를 넘어서 나름대로의 보편모델로 승화되어야만 그 매력을 잃지 않을 것임.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과제를 안고 있음

토론주제-4 : 중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는 단연코 중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문화유산과 관련될 수밖에 없음. 역사와 문명, 그 자체가 중국의 소프트 파워 자산임. 이 중에서 유가 (儒家) 사상은 서구와는 다른 중국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국문명의 핵심 요소로서 주목받고 있음

최근에는 중국 정부도 이러한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는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음.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연구와 개념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확산에 대한 관심은 중국이 최근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자학원 (孔子學院) 설립과 문화외교에서도 잘 나타남. 공자학원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어 학습 열기에 부응하고 세계 각국에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 중국어 교육과 중국 문화 전파를 주요 임무로 설립된 중국문화센터

이밖에도 서구의 학자들 (예를 들어 Joseph Nye)이 주목하는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사례들. 예를 들어 노벨상 (가오

싱젠의 문학상 수상 2000년), 영화 <와호장룡>, 농구선수 야오밍, 2008년 올림픽, 유학생과 관광객의 유입 등

그런데 중국의 문화 문화콘텐츠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광석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많음.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콘텐츠” 라고나 할까? 비유적으로 묻자면 ‘중국 버전의 할리우드’ 가 있는가? 중국의 무협영화는 있지만 우주의 공격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중국 영웅의 스토리를 담은 영화가 있는가?

또한 최근의 사례를 보면 중국의 문화콘텐츠에 담기는 내용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적 발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문화의 소프트 파워 정책을 ‘제로섬 게임의 담론’ 으로 인식하는 경향. 예를 들어 동북공정이나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된 한중관계의 처리, 베이징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중화민족주의적 성향 등

이러한 문제들은 언급한 정치적 투명성 (political transparency)의 문제와 더불어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매력을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임

동아시아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토론주제-5 : 중국 외교의 조정력 (coordinating power)?

지식과 문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중국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차원의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중국을 보려는 논의와 연결. 먼저 중국 외교와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논의를 연결시켜 보면,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치적 위상의 상승. 또한 군사비 지출 규모에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로 부상 (중국의 국방비는 2007년에 450억 달러로 공식 발표).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렇듯 부국강병의 잣대로 본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서 중국 외교는 자국의 부상을 동아시아 국가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하도록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지는 강대국으로 참여하여 발언권을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 화평굴기 (和平崛起 - 평화적 부상) 또는 화평발전 (和平發展 - 평화적 발전)에 대한 논의는 이런 배경 하에서 중국이 당면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기. 이외에도 책임대국 (責任大國), 신안전관 (新安全觀), 조화세계 등과 같은 다양한 담론을 개발하여 선전함으로써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

실제로 최근 중국은 과거의 소극적인 외교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외교를 벌임.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인민폐 평가 절하를 유보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것이나, 최근 북핵문제의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ASEAN+3, 상하이협력기구 (SCO)의 주도 등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한 사례

향후 중국 외교는 주변국가들을 상대로 하여 얼마나 매력적인 조정자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중국 외교가 동아시아를 네트워크로 엮어내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중국 외교의

조정자적 역할 증대는 특히 20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작동했던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와 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관심사는 이러한 ‘네트워크 간 정치 (inter-network politics),’ 즉 망제정치 (網際政治)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냐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미국 주도 네트워크와 중국 주도 네트워크 사이에서 한국이 안고 있는 ‘네트워크 외교 (network diplomacy)’의 과제가 제기됨. 다시 말해 이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내세운 중국 네트워크와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미국 네트워크 사이에서 한국이 담당하게 될 일종의 스위처 (switcher) 역할과 관련될 것임

토론주제-6 :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체제변환?

중국의 부상은 어느 한 국민국가의 부상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20세기형 근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체제변환 (system's change)’이라는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음. 특히 중국의 부상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전 중에서 전통 천하질서의 요소를 떠올려 보게 하는 의미를 지님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볼 때 전통 동아시아 질서는 제국 (帝國)적인 동심원 질서의 모습이었음. 일종의 천하국가 (天下國家)의 제국 주권이라는 구조적 원리를 단위차원에서 실현한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존재했음. 이들 국가는 책봉관계와 조공관계를 전제로 한 국가형태였음. 전통 천하질서에서 중원 (中原)의 천하국가와 가장 전형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중요한 주변국은 한반도의 왕조들 (그리고 베트남과 오키나와)

그런데 근대 국제질서의 전파 이후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외생질서의 충격에 의해 변환 (transformation)을 겪음. 주변에 위치했던 한국, 일본,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조공체제에서 벗어나 중국과 대등한 국민국가로 독립. ‘국민국가의 외양을 한 제국’인 중국을 타자로 삼아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변화가 발생

20세기 후반에는 전통 동아시아 질서의 빈자리에 서구에 기원을 두는 근대 국제정치 기반의 미국적 글로벌 스탠더드가 침투.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20세기 동아시아에는 완전히 서구적인 근대 국제질서가 들어서지 못하고 전통과 근대가 중첩되는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게다가 여기에 덧붙여 최근에는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탈근대적인 변화도 발생. 이러한 와중에 국가 차원의 ‘횡적 네트워크’와 더불어 다국적 기업이나 시민사회 등과 같은 비 (非)국가 행위자 차원의 네트워크가 복합적으로 부상

요컨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21세기 동아시아에는 전통-근대-탈근대 질서의 ‘삼중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중국의 부상은 여태까지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취급되었던 전통 동아시아 질서의 조직원리 (상대적으로 위계적이고 동심원적인 전통 천하질서의 원리)가 다시 재조명됨을 의미. 내심 (內心)으로는 중국도 [상대적으로 위계적이고 동심원적인] 신 (新)중화질서의 복원에 대한 관심에 없지 않을 것임

그렇다면 중국은 21세기 동아시아 문명질서의 조직 원리를 새로이 설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매력 있는 프로그래머(programmer)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이 제시하는 동아시아 질서의 상(像)은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러나 21세기 동아시아 질서는 전통질서로의 단순한 복원이거나 또는 위계적이고 동심원적인 질서의 복원은 더욱 아닐 것임. 전통 천하질서도 주변국이 중원의 세력에게 복종한 것은 단순한 중국의 일방주의와 힘에 의해 지배된 것이 아니라(또는 인종적 의미에서 한족의 중국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의 복합적 유입중심으로서 문명권의 중심인 중원에 복종한 것임. 즉 전통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발휘한 위력

21세기 동아시아의 체제변환 과정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맺음말: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학계의 과제

자국의 국익을 반영하는 담론의 생성 차원을 넘어서 세계로 개방된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담론을 생성할 과제

단순한 대항담론이나 경쟁담론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게임을 넘어서 비제로섬 게임적인 동아시아 협력담론을 개발할 과제

단순한 패권경쟁이나 지역화(regionalization)의 문제를 넘어서 진정한 동아시아 지역주의(regionalism) 또는 네트워크 질서를 구축하는 담론을 개발할 과제

좌담식 공개토론

진행 : 김응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SGRA 연구원)

토론 (주제발표에 추가하여) : 「중국에서 본 한일의 중국관」
리강제 (호쿠리쿠대학 미래창조학부 교수)

패널리스트 : 히라카와 히토시 (나고야대학 경제학부 교수, SGRA 고문)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가와시마 신 (도쿄대학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준교수)

김상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부교수)



코멘트



중국에서 본 한국과 일본의 중국관

호쿠리쿠 (北陸)대학교 · SGRA 연구원 이강철 (李鋼哲)

오늘 포럼의 주제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지역구상」과 「중국관」이라는 두가지 사항입니다. 제 역할은 지정토론자이기는 하지만, 발표자 분의 전문적인 발표에 대해 지정토론을 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한 제 생각과 한국과 일본의 중국관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여론으로 보는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중국관

먼저 동아시아공동체의 미래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중 한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 1은 아사히(朝日)신문사와 미국의 CSIS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로서 2009년 2월 13일자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것입니다. 질문은 「10년후 동아시아공동체를 상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인데, 아시아 각국과 미국 등의 9개국 외교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대로 전문가 수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역과 지역경제의 통합을 위한 틀의 확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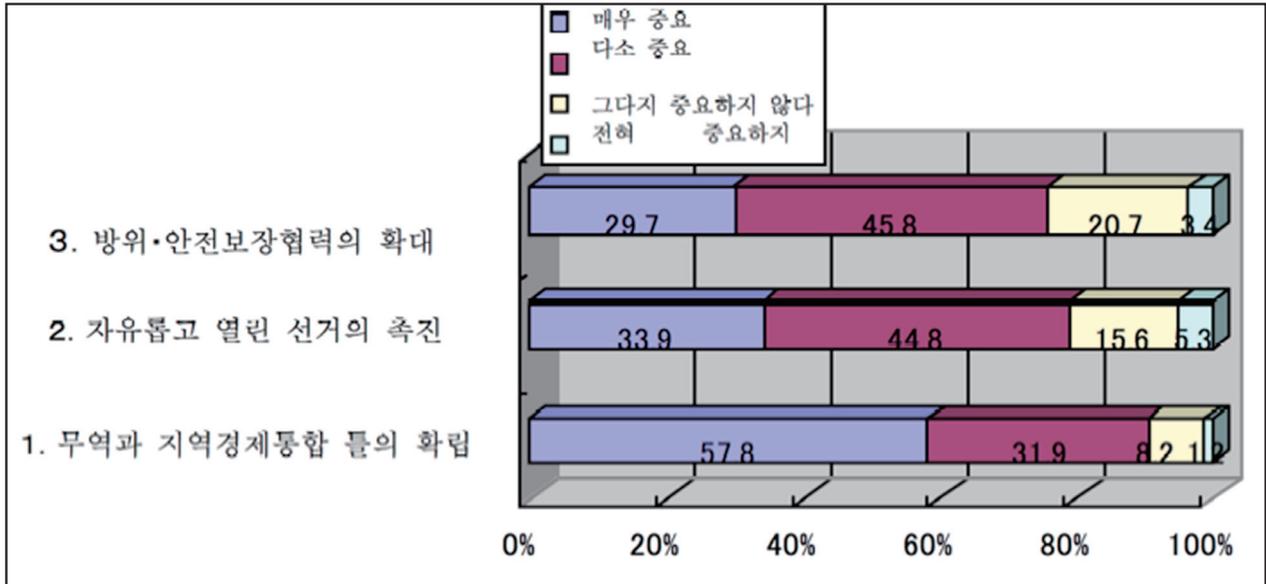


그림 1. 여론조사로 보는 동아시아공동체의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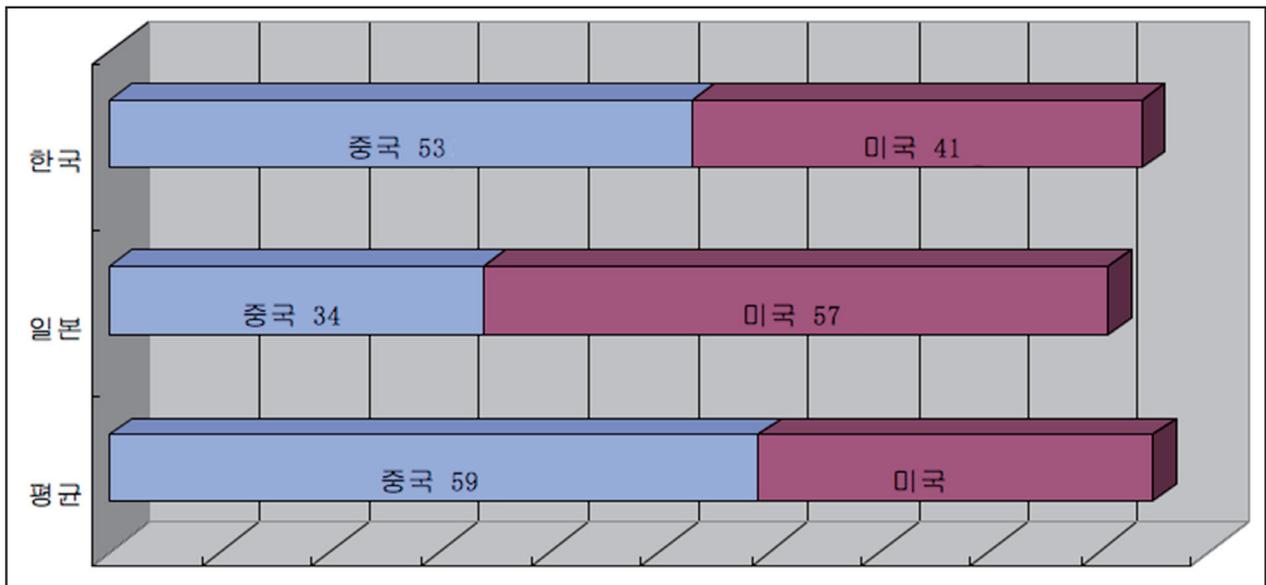


그림 2. 「10년후 자국에 있어 제일 중요한 국가는？」에 대한 대답

그림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중국관에 대해서도 질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0년후 자국에 있어 제일 중요한 국가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에서는 「중국」이라는 대답이 53%, 「미국」이라는 대답이 41%이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중국」이라는 대답이 34%로 한국에 비해 19%나 낮고, 「미국」이라는 대답은 57%로 한국에 비해 16%나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온도차가 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9개국 평균으로 보는 미국과 중국의 양국에 대한 중요도가 각각 59%, 36.1%인 것과 비교하자면 인근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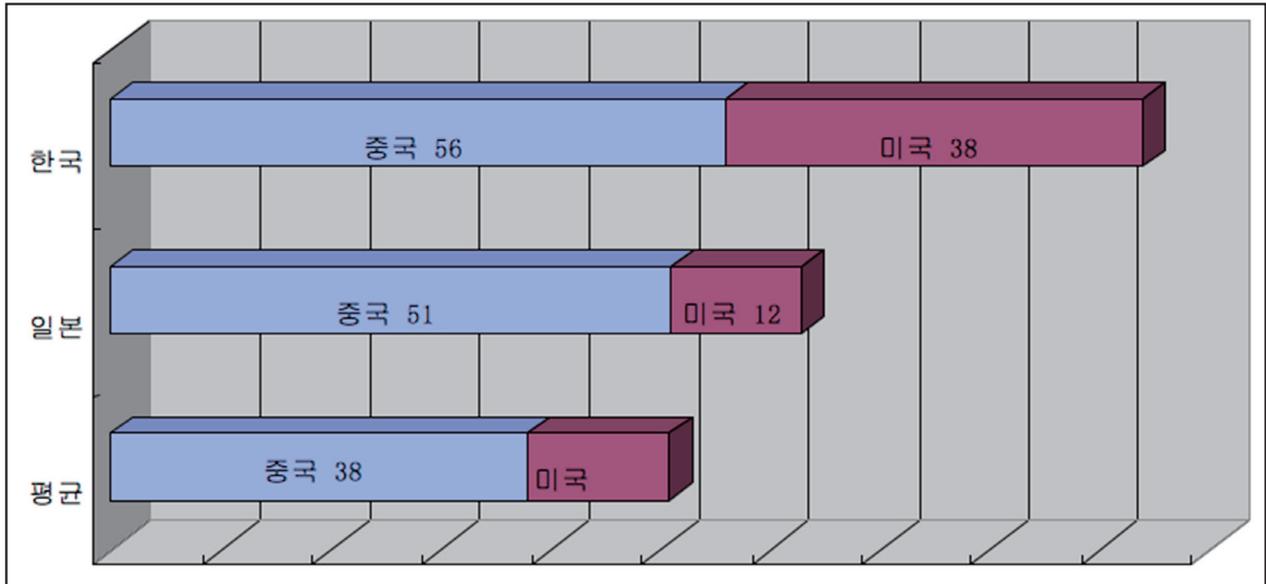


그림 3. 「10년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최대의 위협을 줄 국가」에 대한 대답

또 하나의 질문은 그림 3의 「10년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최대의 위협을 줄 국가」라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중국」이라는 대답이 56%, 일본에서는 51%로 양국에서 모두 반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개국 평균치가 38%로 40% 미만인 점과 비교할 때, 인근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위협인식이 높은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대답은 한국에서 38%인 점에 비해 일본에서는 12%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도 한일 양국이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인식이 배경에 있기에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은 듯 합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의 거리 (차이) 와 그 원인분석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던 것은 중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 국제사회와 한일 양국을 비교할 경우 인식의 격차(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교하자면 일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한중 양국은 국제사회와의 거리(차이)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역사적 경험 속에서 보는 중국관과 현실의 중국에 대한 이해와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일부의 여론 중 「강국」 = 「패권국」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부상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에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20세기 즉 80-90년대 세계적인 냉전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으로 글로벌한 사회에 편입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일당독재라는 정치체제가 유지

되면서 그것에 대한 불신감이 한일 양국 모두에 강하게 남아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지정학(地政学)적으로 인근국가로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면이 있다는 점과 역사인식에 있어서의 한중 양국과 일본 간의 격차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의 국제정세의 변화로부터 보자면 그 표상적인 문제로서 정치적인 문제, 즉 일부 정치가에 의한 무책임한 발언 및 그것을 화제로 삼아서 시청율을 높이고자 하는 텔레비방송의 편향적인 보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 보자면 인근국가와의 외교문제를 가지고 줄곧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 심층(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민족주의(내셔널리즘)와 자국·자민족 우월의식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는 점 및 국력관계의 변화에 동반하여 그러한 것들이 강해져 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의 심층원인은 「가치관외교」에 대표되는 냉전사고가 잔존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즉, 「공산주의」, 「공산당」 등에 대한 지나친 알레르기 반응이 언론을 통해 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이상으로 냉전적인 사고가 남아있는 듯 합니다. 특히 일본의 일부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세계가 동아시아나 중국에 큰 관심을 갖고 전략적인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큰 관심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위협을 느끼고 대립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여론이 뿌리깊게 존재하는 점은 일본에서 생활하며 항상 느끼는 점입니다. 100년도 더 된 「탈아론(脱亜論)」의 새로운 버전이 당당하게 주간지를 통해 소개되어도 그다지 눈에 띄는 비판이 가해지지 않는 점 또한 대단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100년 전의 「탈아론」은 일본의 당시 상황을 생각할 때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아시아를 차지하고는 일본의 장래를 생각할 수 없는 시대이므로 새삼스레 그런 주장을 강조하는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반일감정에 대항하는 듯한 혐중(嫌中)·혐한(嫌韓)감정에 선동되고 있는 여론의 편향성을 보면 일본과 아시아의 장래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리라고 봅니다.

경단삼형제의 역학관계의 변화와 관계의 안정성

저는 한중일 3개국을 둘러 보고 있자면, 삼형제와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일본에서 한 때 「경단삼형제」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그 말을 빌리자면 3개국 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기를 걸친 최근 20여 년간, 한중일 3개국 관계는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한 근거에 있는 요인은 국가 간 국력균형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해 왔지만, 한국의 급속한 성장과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의해 근대화 이래의 절대적인 우위를 상실했고, 거품경제 붕

과 이후에는 잃어버린 10년이 이어지며 자신감 상실이 나타나 보수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30년간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종합적인 국력에서는 일본을 초월하는 힘을 갖게 되면서 「부국강병」의 국가전략을 진행하며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적인 측면을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대중화(大中華)의식이나 사상이 대두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성공하여, 경제대국으로의 꿈과 더불어 민족주의적 경향([소중화]주의의 대두 경향)이 보여집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 질 것이 없다 혹은 한국문화가 일본에 비해 상위문화하다고 하는 인식이 뿌리깊게 남아 있습니다.

3개국을 둘러 보자면 라이벌 의식이 최근 수십년 사이에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대화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절대적으로 서열적 우위를 점했던 것이 근대 100년 가까이 있어서는 일본이 절대적 서열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서열관계가 애매해지면서 「경단삼형제」가 서열우위의 경쟁에 에너지를 쏟기 위하여 하나의 경단으로 굳어지지 못 하고, 따로따로가 약해지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만약 상호 간에 긴밀히 협력한다면 분명히 구미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동아시아의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수년 간 한중일 3개국은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3개국 간의 무역에 있어서의 상호 의존관계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지탱하는 힘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21 세 기 에 나 아 가 야 할 길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은 지금 현재 여전히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아세안(ASEAN) 공동체를 2015년에 성립한다고 하는 선언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이 협력하여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하는 중핵적인 역할을 맡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 지역이 격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은 국가의 대소를 불문하고, 평등·호혜·평화공존을 최대의 공통과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중일은 동아시아 사상에 있어서 공통의 기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 중화문화권이라고 많이 불리웠었지만, 그러한 사상이나 문화는 더 이상 중국만의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 사회에 정착한 문화라고 봅니다.

2500년 전의 성인인 공자의 말을 빌려 공동체구축의 지침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求大同, 存小異」(큰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작은 차이에는 유보한다)
- 「大行不拘小節」(대거를 행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것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군자는 화목하되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화합하지 않는다)
- 「大事化小, 小事化了」(큰 문제는 작게 해야 하고, 작은 문제는 없애야만 한다)

공자의 말은 인간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지침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큰 참고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 지정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희

동북아시아인이신 리강제 교수님, 열의에 가득찬 토론 감사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의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 간의 의견 혹은 질문을 각자 3분 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라카와

김상배 교수님의 한국의 중국관과 손열 교수님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들의 발표에서 모두 나온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저는 국제정치가 전공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중간층이 생겨남으로써 문화가 공통화하기 시작했다고 종종 말을 하곤 합니다. 이점은 유럽과는 다르고 물론 미국과도 다르다는 지적인 듯 합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아시아에서 인기를 끄는 것도 그렇고, 또 한류붐이 일어나 일본의 여성들이 한국의 스타를 쫓아다니는 것도 그러며, 거기에 대만이나 홍콩의 영화가 동남아시아와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도 물론 인기가 있지만, 아시아의 영화가 '복권' 되고 그 영화들을 아시아의 사람들이 서로 수용해 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나라의 힘이 일방적으로 강해지기보다 아시아적인 것으로서 서로에게 수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발표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

서는 들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적하신 분이 계실 지도 모르겠는데요. 한국 학회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있습니까?

손열 히라카와 교수님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구상에 관해 최근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보고 있다면, 고이즈미 수상의 5년 동안은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그 후 아베 수상 시절에는 민주동맹론 혹은 민주국가끼리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후쿠다 수상 때에는 내해론(内海論), 즉 아시아와 태평양을 크게 만든다고 하는 구상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는 동아시아 공동체론 안에서 정의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수상이 바뀔 때마다 구상이 변해 간다는 인상을 주변국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그것들은 단순히 구상의 레벨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은 아이덴티티의 변화 뒷면에 있는 위기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거기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웅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른 질문들이 다 끝난 후, 정리해서 한번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가와시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가와시마 한국측 발표에 대한 코멘트가 뭐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리강제 교수님이 천안문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관심있게 제가 들은 부분은 천안문 사건에 대한 한국의 동향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1992년이지만, 실은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고, 그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관계가 긴밀해 졌습니다. 89년에 천안문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관계의 긴밀화는 중단되지 않았고, 92년에 국교가 정상화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한창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고 있던 가운데, 한중은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천안문 사건을 계기로 해 중국관이 크게 변용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닐까요? 즉 천안문 충격과 같은 것을 한일의 중국관에 있어서 공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인상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한국측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발표는 모두 영국의 Foreign Policy Centre의 Ramo 교수님이 발표한 이른바 「베이징 콘센서스」라는 논의를 기저로 하고 계십니다. 베이징 콘센서스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의 양쪽 모두를 지적하시면서, 만약 중국이 자국 나름대로의 외교력 혹은 조정력을 발휘할 경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신 듯 합니다.

이점에 입각하여 두 분의 교수님들께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두 분 발표의 범위와 대상으로 하시고 있는 지역의 문제입니다.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자면 아마도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개념을 말합니다. ASEAN + 3,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러한 지역을 구상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한중일이라는 영역에서 생각할 경우와 동남아시아를 넣어서 생각할 경우가 상당히 다르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잘 구분해 보면 한중일에 있어서의 중국의 리더쉽 또는 앞으로의 일들을 상정하는 경우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경우의 두가지가 있는데, 오늘의 논의에서는 이 양자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를 나눈 경우는 어떤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리강제 교수님의 보고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중국이 스스로 어떤 형태의 베이징 콘센서스를 만들어 나갈 때, 역사적인 문제와 유교의 문제라고 하는 두가지의 것들은 그러한 콘센서스의 요소로서 나온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실은 역사연구자로 중국외교사가 전공이기에 이런 것들을 말씀 드리는데, 역사적으로 실제 정말 뭐가 있었던가 하는 사실보다도 「역사는 이랬다」라고 지금의 중국의 외교 당국이 어떻게 이미지하고 있는가, 즉 과거에 조공은 이러했다, 중국과 주변의 나라들과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등 지금의 지도자들이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행하고 있는 류의 실제의 외교문제를 분석하여 「사실은 이러했습니다」라고 하는 등의 연구는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책의 단계에서는 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경우 지금의 중국 지도부가 과거의 전통이라고 말해지는 책봉이나 조공 등등의 것들에 대해 어떻게 이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편 유교에 관한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 등의 여러 유교권 용어들이 존재하지만, 동아시아에 있어서 베이징 콘센서스를 만드는 경우 혹은 동아시아 나름대로의 국제질서를 만드는 경우, 아무래도 유교를 기초로 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의문입니다. 유교라서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유교의 가르침 가운데에는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적인 말들을 사용할 경우, 역시나 최종적인 해석권은 중국측에 넘어가 버리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에는 오랜 전통적 유학의 역사가 있으므로 논쟁하여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국에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내에서는 유학을 중심축으로 놓을 경우, 결국에는 용어해석권을 중국측이 잡을 것이라는 논의로 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김상배 두 분의 교수님들께 한개씩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가와시마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일반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론적인 관념적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학회에서는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히라카와 교수님의 발표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공동체에 관한 것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보통 공동체라고 하면, 각각의 구성 안의 아이덴티티 융합, 즉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사회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다소의 논의가 막 시작된 정도로 아직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목표를 멀리 보시기에,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공동체」까지는 가지 못 했지만, 이미 그 중간의 단계에 있고, 더더욱 짧은 기간 안에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내의 저희들이 참고로 할 만한 논의가 있으시면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손열 가와시마 교수님께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의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격감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웅희 그러면 일단 청중 여러분들로부터도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모처럼 아사히신문의 아시아네트워크로부터 가와사키 씨가 참석해 주셨으니 한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와사키 아사히신문의 아시아네트워크라고 하는 싱크탱크의 사무국에 있는 가와사키입니다. 이제껏 20 여년 신문기자를 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하나하나 다 자극적인 주제였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한중일이라는 것에 대해 한말씀 드리려 합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소중한 사이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20 여년간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루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미디어업계의 종사자인 바로 잡학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간 것은 1982년으로 26년전의 일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직후였지만 아직 군사정권 하였습니다. 그 후로 한국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요? 1987년에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1991년에는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맹했고, 1992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한국이 배출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몇 차례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에는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가 처음으로 중국에 간 것은 1988년으로 천안문 사건의 1년 전입니다. 시차 때문에 전혀 잘 수가 없어서, 아침 4시에 천안문 앞인가 건국문 밖 쪽으로 나갔더니 똑같은 인민복을 입은 사람들이 100만대의 자전거를 타고 우르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작년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 제가 한번 더 갔을 때의 중국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던가요? 저는 지하철 도자이선의 니시카사이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일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들도 있습니다.

최근 20~30년 사이에 한중일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정책구상인 지역주의나 지역공동체라는 것과는 다른 부분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상호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느껴 왔는지에 대해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의 5월에 아시아네트워크의 담당이 되기 전까지 저는 아사히신문의 오피니언면을 담당했었습니다. 또 1년반 정도 영국의 빌 에모트(Bill Emmott)라는 에코노미스트지 편집장의 칼럼을 번역해 게재했었습니다. 그는 작년 봄에 칼럼 중의 엑기스만 골라 「Rivals」라는 책을 냈는데, 그 일본어판이 「아시아 삼국지」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안 들어가서 죄송한데, 중국, 일본, 인도라고 하는 세 개의 라이벌들이 앞으로의 세계에 있어 매우 큰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격차나 인구, 문화, 과거의 역사문제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나누어서 본 책입니다.

결국 저는 앞으로 한중일은 여러가지 과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사이 좋게 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정책구상은 차치하고 구체적인 협력이란 무엇일까요 하고 생각해 보자면, 예를 들어 통화의 협력이나 무역 쪽이겠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환경 부분일 텐데,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한국이나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한중일은 그 때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더하여 유행병(pandemic)이나 해적이라고 하는 비전통적 안전보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 하는 것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와서야 가능하게 된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동북아시아는 보다 긴밀하게 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와시마 교수님의 그래프를 보면서, 중국을 알면 알수록 일종의 혐중감(嫌中感)도 증가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제와서 헤어질 수도 없는 한중일인 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니시카사이의 이웃들과 어떻게 같이 지낼 것일까 하는 것들도 포함하며 결국에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듯 합니다.

질문으로서는 중국이 정말로 환경 면에 있어서 우리들과 함께 협력 가능할 것 일까라는 점에 대해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와타나베

김상배 교수님과 가와시마 교수님이 말씀하신 조공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간단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상배 교수님의 토론 테마 6의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체제변환?」 중에서 「주변에 위치하고 있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 조공체제로부터 빠져 나가」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서민감각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다소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계에서는 그렇게 정의 내리시는지 하는가가 첫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리강제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문제점 : 오해와 편견?」 부분의 아래 쪽에 「매스컴의 폭력」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쿠다

조금 시점이 다를 지도 모릅니다만, 가와시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보니 미국에는 미국인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처럼 중국에는 정말로 중국인이 있는 것인지, 다양성의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소 다른 것은 아닌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어떤 의미로는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일본인이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예를 들면 마켓이나 장래성이라는 의미 외에 예를 들어 한국인이나 일본인과는 달리 생각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일본인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내에는 아무도 미국인이 존재하지 않고, 앵글로 색슨이 있고, 독일인이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인이 있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거기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저는 중국을 잘 모르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다들 자기 나라 사람들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하는 말을 듣게 되면 화를 내곤 하는데, 중국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느 지방의 중국사람이나, 나 자신은 중국인이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라는 식의 대화가 됩니다. 이 말은 중국인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감각적으로 다른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활감각 레벨의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모토 아쓰미국제교류장학재단의 훌륭한 사업에 정말로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교수님들의 말씀 또한 대단히 큰 참고가 되었습니다.

실은 저도 구 후지은행의 국제교류장학재단의 전무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국제교류사업을 담당하고 있기에, 오늘의 테마인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것에는 전부 터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 재단의 장학생 출신으로 지금은 일본 국립대학의 준교수를 하고 있는 도쿄대학 박사출신의 여성이 「지금 한국은 큰 일입니다. 중국이 대두해 오고」라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때 국경을 기준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은 공생사회라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북경 올림픽 때에도 보도된 것처럼 중국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 속에서 역시나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인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모두 다 같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대기업들이 점점 더 중국에 공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로 보자면 싼 노동력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이 모두 다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평등화인 것이고 그것이 인류 사회에 있어서의 도착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도 중국이 대두해 오니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은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풍족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발상을 갖고 논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바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교수님들의 생각을 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 이 테마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의 지식 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박한 수준의 질문이 되어 버립니다만, 방금 전에 리강제 교수님의 결론 부분에서 21 세기에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점에 있어 중국적인 관점에서 여러가지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해 상당히 예전부터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실제로는 각각의 나라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EU와 같은 완전한 공동체로서 형식화된 하나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 상황, 아직 지금은 그런 상황인 듯 합니다. 각각의 나라들에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라카와 교수님의 발표문 15 쪽에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중국의 패권주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럼 한국이나 중국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리강제 교수님의 「21 세기에 나아가야 할 길」에는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은 조금은 양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중국 사람

들에 대한 호소와 같은 느낌으로 저에게는 읽힙니다.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중국 국내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신지요? 한국과 일본이 강하게 주장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일반인들의 레벨에서는 물론 전문가의 레벨에서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 듯 한데, 한국과 중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논거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슈라트프 동아시아 지역을 논할 때, 북한을 배제하고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통한 한일의 중국관이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즉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나 자세에 대해 한일은 각각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요? 중국관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도 포함하는 한국 국민들은 중국의 자세를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므로 학생들로부터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상정하면서 문졌습니다. 기분을 해친다면 죄송합니다.

우선 방금전 유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각각의 유교관이라는 것은 서민적인 혹은 학생의 레벨에서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김상배 교수님과 손열 교수님께 문졌습니다. 이른바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일어나면 한국 정부는 민간의 교류에 대한 제한을 실시하시지요. 이른바 경고를 냅니다. 그러한 정부의 일본에 대한 어떤 의미로 보면 인베이션과 같은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웅희 여러 질문 감사합니다. 시간상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각각의 질문에 대해 각 교수님들께서 한 분당 2 분 안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라카와 손열 교수님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논의에 대해 정권이 그냥 넘겨 버리고만 있는 동안에 점점 더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면, 표면적으로 여러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그 차이에 대해 신경을 쓴다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은 없는 듯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의 아시아 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점 하에서 아시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각 수상 및 정치인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관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 수상인 아소 씨는 2006년의 외상 시절에 「자유와 번영의 호」라고 하는 중국 포위망을 짜려고 했었는데, 그 때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됩니다. 가치관 외교로 아시아를 나누어 가는 정책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외교에 있어서 하나의 가치관을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가치관이 틀린 그 밖의 나라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본래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외교의 패배일지도 모른다고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

각합니다. 가치관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제안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치관 외교를 강조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공동작업은 당초부터 불가능하게 됩니다. 중국이 스스로 현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공동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진배없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실은 아시아의 정치경제적 국제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속에서 일본에 대해 패전 이후 계속되어 왔던 국제 외교정책의 본질적 자세에 대해 과제와 재고를 안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 각각의 지도자들이 아시아정책을 갖고 아시아의 국가들과의 거리가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제를 지금의 정권은 피해서 지나갈 수가 없고 무시할 수 없게 된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라는 문제를 주제로 하면서, 거기에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자면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화하여 지금의 대중국 의존도가 지극히 커져 뿔레야 뿔 수 없는 사이가 된 현상황을 전제로 하자면, 그러한 한계 속에서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틀은 무시할 수가 없는 근대 국가체계를 뛰어넘어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깊은 후에 논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고이즈미 수상의 동아시아 커뮤니티 혹은 동아시아 공동체 등 일본의 제안은 특히 중국의 주도권을 견제하는 제안이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형성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면에 주목해 그것들을 국가를 넘는 신뢰와 사회형성을 향한 계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상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점입니다. 오해를 낳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공동체가 먼 장래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공동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만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외로 빨리 실현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론에 반대 또는 회의적인 사람들은 아시아의 국경의 벽들은 유럽과 비교해서 현격히 높기 때문에 공동체는 무리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아시아에 공동체는 불가능하다는 논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무성 측이 하는 말이지만, 기능주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공동의 이상을 미래에 있어서 그 목표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북한 문제는 6자회담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본래라면 6자가 아니라 5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지금의 아시아에는 지역으로서의 자기조정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2차대전 후의 질서 속에서 그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자면 이러한 곤란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는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사람들이 신뢰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불가능한 것이니 소용없는 것이니 하는 전제로부터 역사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론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들이 과거로부터 문제를 설정해 온 것들었습니다. 유교의 문제도 그렇고, 아시아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격차가 크고 문화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다음의 논의를 생각하면 그

것은 미래를 역사결정론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되고, 역사공정론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갖고 거기에서부터 신뢰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양성을 갖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지 하는 점에 대해 제가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민족이나 출신을 소중히 하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것을 버리지 않을 경우 공동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그런 공동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소수의 민족이더라도, 훌륭한 역사가 있는 나라더라도 없는 나라더라도,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더라도 그렇지 않은 나라더라도,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틀이 공동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장래를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손열 여러가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대답하겠습니다. 이른바 베이징 콘센서스가 한중일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동남아시아를 포함할 경우에는 꽤 다를 것이라고 가와시마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관계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메세지라도 어느 나라에 있어서는 잘 받아 들여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다지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적인 매력과 글로벌적인 매력을 비교할 경우 일본에서는 글로벌적인 매력 쪽이 지역보다 높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일본은 아시아를 뛰어 넘고 있기에 서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력을 느끼지만 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이 될 경우 그 매력의 레벨이 꽤나 내려갑니다.

오늘은 일본인의 중국관, 또 한국인의 중국관을 두루 살펴 보았는데,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글로벌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갭이 나타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갭이 동아시아에서 공동체 형성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방금전 민간 교류의 이야기에서 교과서문제, 역사문제가 나왔을 때, 정부가 민간교류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체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때 학생이나 한국의 일반인들이 거기에 반발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정책결정자 또는 외교관 레벨에서 역사가 이미지하는 소프트 파워의 마이너스 면은 큰 듯 합니다.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일본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일본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와시마 대답하기 전에 지금의 손열 교수님의 이야기에 대해 원칙대로 하자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글로벌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구미를 포함한 세계에서는 중국의 여러가지 공헌을 평가하며 지역적으로 이웃나라들은 그것에 대해 반발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 향후 한층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일안보이나 한미관계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 의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김상배 교수님으로부터 일본의 연구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면 복잡해지므로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PHP 종합 연구소의 마에다 히로코 씨라는 연구자가 중국의 미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상정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손열 교수님으로부터는 왜 일본의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글로벌화 쪽에서 설명할 수 있는 면과 반일테모를 포함하는 중국과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고 있다고 일본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관계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학생들이 움직입니다. 최근의 학생들은 코스트 의식이 높기 때문에 귀찮은 일은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 합니다.

가와사키 씨로부터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자신은 자국을 도상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대국이기는 하나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전례가 없는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는 어디까지나 개발도상국으로서 행동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도야코 서미트 때도 중국은 도상국들과 함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중일 간에 논의하는 경우에는 힘에 있어서는 대국 간이어도 행동으로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점이 여러가지 면들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비슷한가 하는 이야기인데, 언제나 논의가 되는 것으로 일본 쪽이 호모지니어스라니 혹은 나라의 규모 등등 여러가지 것을 갖고 비교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문명과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점을 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의도 항시 있습니다. 같은 모르겠지만, 한가지 인도에서 북경으로 들어가면 북경은 정말로 호모지니어스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뉴욕과 델리와 북경을 비교하자면 북경이 제일 호모지니어스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레벨의 인상이 들어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생의 관해서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단지 주의해야 할 것은 예를 들면 최근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한 10년도 더 전에 도쿄대학에 유학하다가 중국에 일시귀국중 체포되었던 위구르인 학생이 최근에서야 겨우 석방된 사건이나 혹은 아사히신문이 이번 주의 화요일에 그리고 산케이신문은 수요일에 보도한 중국내 조선족 썩크탱크 소속 연구자가 북한정보를 둘러싸고 체포되었다고 하는 상황일 듯 합니다. 두사람 모두 제 친구 혹은 후배에 해당하는데, 주변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본측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레벨이 아닌 미디어를 포함한 언론 레벨에서 보자면 북한문제가 일본인 납치문제에 상당히 끌려다니고 있기에 핵무기 문제나 그 밖의 이른바 북한의 질서가 붕괴할 것인가를 둘러싼 중국의 공헌이나 역할은 일본에서는 잘 안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북한문제를 납치문제에 연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김정

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납치문제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이 톱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이 현실의 문제와 맞지 않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 여러가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전부 다 대답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인 것 같아서 저로서는 네 개의 포인트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히라카와 교수님의 민간교류 네트워크에 관한 것입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의 생각은 아이덴티티의 문제와도 관계되리라 봅니다. 매우 다양한 의견이 여론 조사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가 절대적인 결과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필요할 듯 합니다. 지도층 레벨에서의 한중일 상호인식과 일반인들의 각각의 경험에 근거하는 인식이 과연 같은 것일까요? 근대국가적 지도층의 발상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같이 대중에게 부여되어 대중이 그러한 이미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때문에 서로의 경험의 차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 아닐까요? 경험 속에서 여러가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식 속에서 기타 다른 부분이 나오는 것을 서로 조화롭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인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조립해 갈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서로 노력해 가는 것이 한중일 리더십의 역할이며, 그것은 대중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가와시마 교수님으로부터 동아시아의 공간 범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등 다양한 공간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간 그 자체보다는 그 공간에 대한 발상을 바꾸고 싶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는 지정학이라는 공간에 관한 것과 지역경제학에 관한 논의가 행해지는데, 실은 두가지 다 하드 파워라고 하는 기준으로부터 나오는 개념입니다. 21 세기의 개념은 그것보다 더 입체적으로 지식이나 네트워크적인 발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다른 공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지식 중심의 지역공간도 물론 나옵니다. 또 상상의 공간, 마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개인의 관심사에 의해 동아시아의 이 공간도 다양한 형태로 조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대적인이고 하드 파워적인 관점만으로는 동아시아의 협력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발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심인 것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언급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공체제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근대국가의 정치적인 발상으로부터 볼 때 조공체제라고 하면 어느 한나라가 윗나라에 대해 현상한다고 하는 계급적인 문제, 전근대적인 불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움직이는 조직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근대적인 입장에서 불평등하다라던가 조공을 하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거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일본은 완만한 조공체제였지만, 한국이나 베트남과는 또 다른 형태의 독특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중국이 개항을 하고, 문호를 개방한 후, 중국과의 관계가 파괴되어가는 가운데 전통적인 국제질서를 지키는 하나의 형태로서의 조공체제가 붕괴해 갔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은 각각 다른 형태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점은 회고주의적인 입장에서부터의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자 회담은 6명의 네트워크가 만든 것으로 링크가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링크로부터 형성된 네트워크라는 전체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의 하나가 6자의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단 그 참가자들의 네트워크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6자의 네트워크 속에서 미싱 링크인 것이 북한입니다. 한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링크가 매우 약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긴밀한 링크를 갖고 있습니다. 6자 간에 만들어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형태 속에서 중국이 발휘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근대적인 발상에서 본 북일관계를 논의할 때, 네트워크 속에서 중국이 행하는 역할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흥미로운 관점이 될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리강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놀란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인들이 중국인들보다 『논어』를 더 많이 읽고 있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저는 사회주의국가로부터 왔기에 일본은 자본주의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더 많이 읽고 있던 것은 일본인이었던 점입니다. 50년대, 60년대의 대학생들은 거의 전원이 『자본론』을 읽었다고 하는 점 이었습니다. 즉 밖에서 상상하는 일본과 제 자신이 본 일본은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논어』를 쓴 공자 가계(家系)의 모임이 한국에 있는데, 그 공자 가계의 인구가 한국에 270만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공자 자손보다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긴 역사 속에서 한국, 일본 모두 부지불식간에 혹은 의식적으로도 중국에서 출발한 공자의 문화나 유교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왔고, 그것들은 반드시 중국의 독점적인 것들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속담이나 사자속어들은 일본인의 몸에 스며든 하나의 문화 또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일본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속담을 인용하면 「아, 중국에도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까?」라는 말을 종종 들곤 했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원래 중국에서 생긴 것이예요」라고 대답했었습니다. 현대 일본인들은 일찌기 받아 들였던 중국의 문화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의 장래를 생각하는 경우, 반드시 유교문화라는 것이 중국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한국인, 일본인들의 어딘가에 이런 문화나 사고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전 히라카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의 큰 목표를 세울 때, 어디가 공통되는가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서로 이해하면서 손을 같이 잡고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김웅희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생각해 가는데 있어서 소프트 파워와 신뢰를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할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강사약력

■ 히라카와 히토시 [平川 均] Hitoshi Hirakawa

1980년 메이지대학대학원 경영학연구과 박사과정 단위취득. 1996년 교토대학 박사 (경제학). 1980년부터 나가사키현립대학, 이바라키대학 등을 거쳐 2000년 10월부터 나고야대학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부속 국제경제정책연구센터 교수. 주요 저서로 『NIES-世界システムと開発』 同文館, 1992年. 『からゆきさんと経済進出-世界経済のなかのシンガポール-日本関係史』 (清水洋氏との共著) コモンズ, 1998年. 『第4世代工業化の政治経済学』 (佐藤元彦氏との共著) 新評論, 1998年. 『賠償と経済進出』 『岩波講座アジア・太平洋戦争7』 (倉沢愛子ほか編) 岩波書店, 2006年.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主義』 『経済科学』 (名大) 第55巻第4号, 2008年.

■ 손 열 [孫 洌] Sohn Yul

서울대 사범대 졸, 미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중앙대학교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동경대학 사회과학 연구소 외국인연구원, 중앙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현대일본학회 이사, 한국 국제정치학회 이사 역임. 저서로 『일본: 성장과 위기의 정치경제』, 『Japanese Industrial Governance』, 편저로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등이 있다.

■ 가와시마 [川島 真] Shin Kawashima

1968년 동경 출신. 동경대학대학원 단위취득만기퇴학. 박사 (문학, 2004년 동경대학). 일본학술진흥회특별연구원, 후카이도대학법학부 조교수 등을 거쳐 2006년 10월부터 동경대학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준교수 (국제관계사). 전공은 아시아정치외교사 (중국외교사). 주요 저서로 『中国近代外交の形成』 (名古屋大学出版会, 2004年. 산토리학예상수상), 편저로 『中国の外交』 (山川出版社, 2007年), 공편저로 『東アジア国際政治史』 (名古屋大学出版会, 2007年) 등이 있다.

■ 김 상배 [金 湘培] Kim Sangbae

1989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일본 국제대학 산하 Glocom (Center for Global Communications) 객원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책임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2008, 편저), 『인터넷 권력의 해부』 (2008, 편저),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원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2007, 저서),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2006, 공편저) 등이 있다.